

기자회견

오세훈 서울시장 1년 공약이행 평가발표

- 일시 2023년 7월 4일 오전 11시
- 장소 서울시청 신청사 앞
- 주최 서울WATCH(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교통, 서울환경운동연합,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 문화연대

- ❖ 사회 김광일 (녹색교통 사무처장)
- ① 취지 및 개요 윤순철 (서울와치 대표)
- ② 공약이행 총평 이병국 (서울와치 사무처장)
- ③ 시민설문 결과 남은경 (경실련 의정감시센터 사무국장)
- ④ 발언 ① 환경 이동이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
- ② 문화 김재상 (문화연대 활동가)

- ※ 문의 이병국 (서울watch 사무처장,
채연하 (시민행동 사무처장, 0
조민지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서울Watch

(03085)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68. 호은빌딩 3층

☎ 02-734-3924 • 📠 02-6280-3924 • Blog: <https://m.blog.naver.com/watchseoul>

오세훈 서울시장 1년 공약이행 평가 보고서

1. 공약이행 1년 평가 취지 및 개요

1.1. 평가 취지	3
1.2. 평가 개요	4

2. 공약이행 평가 총평

2.1 서울Watch-문화연대 총괄 평가	5
2.2 서울시민 공약 여론조사 결과	10

3. 공약이행 분야별 평가

3.1. 주택분야	12
3.2. 균형발전분야	13
3.3. 문화분야	16
3.4. 교통분야	18
3.5. 돌봄·복지·건강분야	20
3.6. 교육분야	23
3.7. 환경분야	24
3.8. 경제분야	27

4. 공약이행의 지표별 평가

4.1. 법률 조례를 위반 및 재개정 등 절차 미비	30
4.2. 기후위기·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부적절한 사업	31
4.3. 막무가내 개발로 미래가치를 훼손하는 공약	33
4.4. 정치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공약	35
4.5. 예산낭비가 발생·목표달성이 어려운 공약	37
4.6. 계획의 부실 및 진행과정 미비	38

[별첨] 서울특별시 공약 평가 여론조사 보고서

1 공약이행 1년 평가 취지 및 개요

1.1 취지

-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2년 7월 1일부터 제39대 서울시장으로 재임하고 있음
 - 이미 오세훈 시장은 제33대(2006.7-2013), 제34대(2010.7-2011.8), 제38대(2021.4-2022.6)에서 서울시장으로 재임하여 이번은 4선 서울시장임.
- ※ 제38대 서울시장 재임 시 주요시책
 - 약자와의 동행 및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울비전 2030’ 수립
 -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을 위한 서울형 ‘안심소득’ 사업(복지) 및 ‘서울런’(교육) 구축·운영
 - 수변공간(한강, 지천 등) 중심의 공간 재편, 비운드조닝 등 서울시 최상위 공간계획 ‘2040 서울플랜’ 수립
 -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재개발·재건축 규제혁파 및 신속통합기획, 모아주택·모아타운(소규모 주택정비) 도입
 - 1인가구(안심동행)·청년(영테크취업사관학교)·여성(성폭력 제로)·아동(키즈카페) 등 수요자 맞춤형 정책 추진
 - 시민단체를 표방하는 단체에 대한 위탁수수료·보조금·인건비 지원 최소화
 -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관광업계·취약계층 지원 확대 및 공공의료 강화
- 제39대 오세훈 서울시장의 비전은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이지만 공약의 대부분은 제38대(‘21.4-’22.6) 시장 당시 공약의 연장으로, 사실상 서울시장 2년차로 볼 수 있음
 - ※ 제39대 오세훈 서울시장의 5대 핵심 공약 : ①안심소득으로 복지 사각지대 없는 서울, ②누구나 살고 싶은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③서울런으로 교육격차 해소. 교육사다리 실현, ④공공의료로 보호받는 건강특별시 서울, ⑤서울 전역을 수변감성도시로 조성 추진
- 서울WATCH와 문화연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및 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를 추진함
 - [공약평가]는 과거 시민단체들이 공약이행율에 머물던 평가에서 나아가 공약의 이행은 물론 이행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사회적 가치와 시민소통, 예산낭비 등도 점검하여 이행의 결과가 시민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하였음
 - [시민여론조사]는 사실상 재임 2년차에 해당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5대 핵심공약 및 시정운영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를 조사하였음.
- 서울WATCH와 문화연대는 4번째 서울시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이 자신의 비전처럼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만들고 있는지, 취임사의 “약자와 동행하는 상생도시 서울, 매력있는 글로벌 선도도시 서울”을 위하여 어떻게 시정을 진행하고, 그 열매가 서울시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지는지 등 시민의 눈으로 성과와 문제를 평가하고, 향후 시민을 위한 시정을 위해 필요한 문제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임.
 - 서울WATCH와 시민단체들은 매년 오세훈 시정을 시민들과 함께 평가할 예정임

1.2 평가 개요

1.2.1. 공약이행 평가

- 평가 기간 2023년 4월 20일 ~ 6월 30일
- 평가 대상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민선 8기 공약실천계획서」
(<http://ebook.seoul.go.kr/Viewer/IO6DPZQQIREV>)
- 평가 분야
 - 분야(8) : 주택·균형발전, 경제, 문화, 교통, 환경, 교육, 복지
 - 내용 : 총괄 평가, 8개 분야별 평가, 공약이행 과정의 문제
- 평가 주관
 - 서울WATCH(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교통, 서울환경운동연합,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 문화연대

1.2.2 시민여론조사

- 조사 대상/규모 서울특별시 거주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
- 조사 방법 무선 ARS 100.0%
- 표본추출방법 성·연령·지역별 할당 무작위 추출
-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 3.1%p
- 조사 기간 2023년 6월 26일(월)
- 자료처리방법 EDITING ⇨ CODING/PUNCHING ⇨ CLEANING의 과정을 거쳐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
- 가중값 적용 성별·연령별, 지역별, 가중값(23.5말 행안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 조사 기관 한길리서치
- 응답률 8.7%
- 조사내용
 - ① 서울생활 만족도
 - ② [안심소득으로 복지 사각지대 없는 서울]공약 인지도
 - ③ [누구나 살고 싶은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공약 인지도
 - ④ [서울런으로 교육격차 해소, 교육사다리 실현]공약 인지도
 - ⑤ [공공의료로 보호받는 건강특별시 서울]공약 인지도
 - ⑥ [서울 전역을 수변감성도시로 조성 추진]공약 인지도
 - ⑦ 5대 핵심공약 중 가장 관심 있는 공약
 - ⑧ 서울시장 5대 핵심공약 추진 평가
 - ⑨ 향후 시정 운영 전망

2.1 총평

□ 선택적 약자와의 동행 및 예산낭비 우려

- 오세훈 시장의 '약자와의 동행'을 대표하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국가단위의 선별과정에서의 행정비용, 타 복지급여와 지원금 등을 고려한 정책설계, 지자체별 소득생활 격차에 따른 여러 조건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서울지역 저소득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반쪽짜리 시범사업을 위해 임기 내 500억이라는 적지않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
- 코로나 19 확산 시기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시작한 메타버스, 시민들 호응이 좋자 키즈카페를 100개에서 400개로 확대하는 공약은 예산낭비적 요소가 있음
 - 가상의 환경에서 다른 사용자들과 소통/상호작용하며, 가상 경제 활동이나 콘텐츠 창작, 교육,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서비스의 특성을 무시하고 서울시 단독의 행정서비스를 위한 메타버스를 구축하기 위해 매년 20 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지만 하루 방문객이 400여명에 불과함(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메타버스를 운영했지만 2023년 현재는 거의 폐기 상태에 이르고 있음)
 - 키즈카페의 이용을 위해선 보호자 동행이 필수이지만 한 부모가정, 맞벌이 부부에게는 혜택이 돌아가기 어려운 키즈카페의 확대는 것은 약자와의 동행 기조와 맞지 않고 유희공간이 부족한 서울시와 자치구 여건과 출산을 저하로 수요감소 등 면밀한 정책적 수요를 고려하지 않는 사업
- 저소득 청소년에게 인터넷 콘텐츠가 아닌 학습방법과 동기부여해줄 지속적인 멘토가 필요함에도 민간기업들과 동행하는 서울런 확대
 - 약자와의 동행을 대표하는 '서울런'은 시행초기부터 서울시 예산 25%인 10조 이상을 투입하는 서울교육청의 정책과 배치되어 정책의 일관성을 해치고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방향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
 - 또한 교육부, 교육청의 콘텐츠를 외면하고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민간기업들과 동행하고 있으며, 중장년의 취·창업을 위한 교육콘텐츠 제공으로 확대되었는데 이 역시 오랫동안 더 전문적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곳들과 경쟁하려함.
 - 전문가들은 오히려 급격한 산업의 전환에 따라 실직 위험이 높은 종사자들이 선호

하고 재교육으로 안정적인 직업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금융프로그램 등 제공을 공공기관인 서울시의 바람직한 역할로 제시함.

- 민관협치는 세계적 흐름임에도 서울시가 모든 과정을 통제하고 있음에도 보조금사업도는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부도덕하고 운영비와 인건비를 뽑아가는 ATM기로 폄훼하고, 이동권을 요구하는 장애인, 1년에 딱 하루 세상에 나오려했던 성소수자, 자식 잃은 참사를 겪은 이태원참사 유가족, 합리적인 개선과정없이 조직개편과 고용불안에 처한 교통방송과 사회서비스원 등 선택적인 동행이 이뤄지고 있음
- 오세훈 시장은 동일한 사업이 존재하지만 중복해서 별도의 조직과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우리동네돌봄단, 디지털 소외계층 정보격차 해소지원 사업, 평생학습 장학금 지원사업 등은 자신의 브랜드처럼 만들려는 사업들은 언론을 통해 강력하게 홍보함
 - 그러나 부서별로 산개한 사업들을 통합하지 않고 또 하나의 전달체계를 만드는 등 엄밀하지 않는 정책 설계와 타당성을 검증하지 않아 행정력과 예산 낭비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동시다발적 랜드마크와 무분별한 개발사업으로 건설사들과 동행

-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실행계획서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랜드마크 사업계획들은 대부분 초고층빌딩이나 타워를 기본으로 하며, 수년이 소요되는 랜드마크 건설은 아직 확정된 계획없는 사업들도 많고, 이미 시작된 사업들도 순탄치 않음
 - 초고층 상암DMC(랜드마크용지 매입신청자가 없어 유찰), 여의도공원 제2세종문화회관(타당성 조사 마친 문래동에서 여의도로 변경후 주민갈등, 공원·수목 훼손), 하늘공원 서울링(표절시비, 안전성, 조각장 연계 주민반발), 서울혁신파크개발(과밀개발로 기후위기 가중, 교통혼잡, 주민갈등), 용산국제업무지구개발(기업특혜 매각반대, 공공개발 요구, 부동산 가격 영향), 노들섬 문화예술(조류 등 서식지 훼손, 공모작 구현 600억~1조원), 세종문화회관 리빌딩(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누락), 청량리역 역세권(상습정체구간의 교통체증 심화), 미아역세권 활성화(수익성 제고 명목 고 분양가 책정, 1순위 청약 미달), 광화문광장 미디어아트(빛공해, 교통사고 유발 위험), 강서구 마곡산업단지(복합쇼핑몰 계획에 따른 피해 우려 상인들 반발),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퇴거문제로 HJ중공업과 입주상인들 갈등),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쓰레기 조각장 건립에 따른 주민반대) 등
- 서울시 동시다발적 랜드마크 외에도 공공자산에 대한 개발사업 그리고 14개 개발공약 사업들에 민간을 끌어들여 추진하며 서울은 공사판이 되고 있음

- 창동차량기지과 그 일대에 민간투자는 임기 내 3,375억이지만 임기 후 4조 295억, 수색역 철도 이전부지 복합개발에는 임기 후 3조라는 천문학적인 민간투자, 용도지역을 상향해주면서 민간개발을 유도하는 공약사업 14개의 면적만 3,495,071㎡에 이르는 등 이곳에 투여될 민간자본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가늠하기도 어려움
- 오세훈 시장 임기 내 조성 완료가 계획된 균형발전 사업은 40개 사업 중 5개에 불과하며, 대부분 임기 후에 공사가 착공되거나 시행, 완료될 예정
 - 개발사업은 복잡한 절차와 갈등 등으로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4년 임기 시장의 치적 쌓기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아 사업목적에 맞는 관리를 위해 조급하게 서두르기 보다는 충분한 논의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함
-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계획하는 사업들은 고금리·원자재 가격 상승·부동산시장 침체 등 여건에서 대규모 개발사업들의 부실과 안전의 위험을 안고 있으며, 개발자금들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투기자금이나 민간사업자의 잔칫상으로 변질될 우려가 커 신중함이 필요함
 - 공공자산과 용도지역 상향을 통한 개발사업들의 공공성 및 타당성 견지, 지역주민의 여론 수렴과 이해관계 갈등 조정, 시행 주체의 특혜 시비, 장기적인 서울시 도시개발과의 일치성 등 사업추진 과정의 신중함이 현재보다 훨씬더 요구됨.

□ 과도한 지하공간 활용과 공원녹지 훼손과의 동행

- 오세훈 시장은 서울의 공간활용의 최선의 방안으로 보기 어려운 지하화와 복합화 개발을 과도하게 추진하고 있음
 - 서울시 지상철도 전구간 장기적 지하화 및 지상구간은 선형복합문화공간 조성, 동부간선도로·강변북로·경부간선·국회대로·용마산로 지하화와 지상구간 선형복합문화공간, 대모지하차도 건설, 일원 지하차도 연장, 은평새길·평창터널 민자지하도로, 동작구 이수-과천 복합터널, 청량리역 버스정류장의 지하화, 정릉·수유 차고지 지하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여의대로 지하 복합개발, 녹지네트워크, 간데메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동대문구 장안동 물류터미널 지하화,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지하화, 중랑물재생센터 분뇨처리시설 지하화, 성북구 월곡 적환장 지하화 및 복합체육센터 건립 등
 - 정체구간 도로 지하화는 차량이용을 확대시키는데다 그 외지역의 정체구간을 만들어 내는 악순환의 반복 우려, 지자체 예산으로 건설·유지·보수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민간자본 유치시 유료도로화로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 가중, 환경적으로는 토양산소 유실과 지상부 수목생장에 부정적 영향, 전력사용 증가 및 자동차 배출가스

로 인한 환기장치 주변 지역주민들의 피해, 안전측면에서 홍수·화재·붕괴사고 및 지하수 유출로 인한 지반침하 등 피해들이 일반 도로보다 훨씬 커 이에 대한 대책이 철저히 마련되어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사업의 최소화가 바람직함.

-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대신 공공기여를 받아서 녹지공간을 확충하는 △서울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공약은 고층빌딩이 갖는 반환경적인 댓가로 공원을 짓겠다는 이율배반적인 정책이며, 은평구 은평새길 건설사업도 이미 은평새길 구간에서 세 개의 터널이 있는데 그곳에 2개의 터널을 추가로 건설해 교통량을 분산시키겠다는 공약은 이로 인한 심각한 대기오염이 예상될 뿐 아니라 북한산 국립공원의 생태계 훼손을 유발할 것임

- 한강과 지천변의 이용공간을 확대하는 수변감성도시 조성사업이나 개발사업은 지천변 유희부지의 기능을 저해하는 개발로, 이 유희부지는 비가 많이 올 때 불어난 유량을 감당하기 위함인데 이용공간을 확대하며 불투수 면적을 늘린다면 홍수와 가뭄 같은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 도시의 회복력과 탄력을 담보하기 어렵고, 사업대상 지역에는 생태계보호구역과 모래 교체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지역 생물들의 서식지 파괴와 생태계 교란이 예상됨

- 서울시와 자치구 내에 유희공간이 부족으로 근린공원 내 편의시설들을 과도하게 설치하여 공원과 녹지를 훼손하고 있음

- 서대문지역 대형공원(백련산 일대)과 동대문구 배봉산 치유의 숲길 조성, 여의도공원 재조성, 복합 복지타운SOC, 도봉구 쌍문동 구민체육센터, 강동구 제2구민체육센터 등을 비롯한 체육시설들, 키즈카페 등은 기존 녹지를 훼손하고 새로이 경관숲을 조성하고 데크길, 휴게쉼터, 전망대, 자락길 등 산지형 공원의 과도한 시설화로 공원 내 생태계 교란이 우려되므로 시민들이 온전한 산림을 거닐고, 숲에서 휴식하는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임

- 종로구 송현동 녹지공간 개방 공약도, 초창기 생태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었던 송현동 부지에 가칭)이건희 기증관 건립을 결정하였는데 여기에는 공원하부 지하공간에 관광버스 주차장 50면을 포함하는 450면 규모의 통합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이는 지하개발로 인해 지상부 수목에 미칠 악영향과 토양탄소 유실도 우려되지만, 공원과 문화시설이 이미 적지 않은 종로구에 가칭)이건희 기증관 건립이 공원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 할 지 의문임

-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는 이미 오래전 현실이 되었는데 오세훈 시장의 철학은 성장주의 개발 환상에 머무르며, 기후위기 시대 회복력과 탄성을 담보하는 공원을 개발하고 보여주기식 환경공약을 남발하며 보다 근원적인 접근을 회피하고 있음

- 단순한 여가시설과 랜드마크 건설보다는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녹지 불평등을 해소하는 전략, 폐플라스틱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업 협력보다 서울시 전체 쓰레기 총량 관리를 위한 로드맵 등 기후·생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서울시의 비전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임.

□ 예산낭비·기후위기·양극화 심화 공약 다수

- 오세훈 시장의 「민선 8기 공약실천계획서」에 제시된 공약들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6가지 점검지표를 만들었음.
 - 6대 점검지표는 ①법률/조례 위반·재개정 등 절차 미비 ②기후위기·양극화 심화 사업 ③막무가내 개발로 미래가치 훼손 ④ 정치·사회적 갈등 유발 ⑤ 예산낭비 발생·목표달성 어려움 ⑥계획 부실 및 미비
- 공약의 지표별 평가 결과
 - 오세훈 시장의 「민선 8기 공약실천계획서」는 244개의 공약(상생도시 56 공약, 글로벌선도도시 68 공약, 안심도시 69 공약, 미래감성도시 51 공약)이 제시되었음
 - 평가 6대 지표 중 예산 낭비 발생·목표 달성 어려움 32개(21%), 기후위기·양극화 심화하는 사업 30개(19.7%), 정치/사회적 갈등을 유발 29개(19.0%) 순으로 나타났음
 - 분야별로는 환경분야(20.4%), 문화분야(19.7%), 균형발전분야(16.4%) 순이었음

[지표]	합계 (%)	주택	균형 발전	문화	관광	교통	환경	돌봄	복지	건강	교육
법률/조례 위반·재개정 절차 미비	16 (10.5%)	1	1	3		2	2	1	3	1	2
기후위기·양극화 심화하는 사업	30 (19.7%)	2	4	5		3	11		1	4	
막무가내 개발로 미래가치 훼손	26 (17.1%)	1	7	8	1	1	8				
정치/사회적 갈등 유발	29 (19.0%)		7	6	2	3	6	2	3		
예산낭비 발생·목표 달성 어려움	32 (21.0%)	2	5	3		4	1	3	8	3	3
계획 부실 및 미비	19 (12.5%)	1	1	5		4	3		1	1	3
합계(%)	152 (100%)	7 (4.6%)	25 (16.4%)	30 (19.7%)	3 (1.9%)	17 (11.2%)	31 (20.4%)	6 (3.9%)	16 (10.5%)	9 (5.9%)	8 (5.3%)

2.2 공약이행 시민여론조사 결과

① 시민들의 '서울생활' 만족도

결과 만족 70.7% > 불만족 27.5%

※ 서울시민들은 서울 생활에 대하여 70.7%가 만족(매우 만족 24.6% + 조금 만족 46.1%) 반면, 27.5%는 만족하지 않음(전혀 만족하지 않음 7.0 + 별로 만족하지 않음 20.5%). 잘모름/무응답은 1.9% 임.

② 오세훈 시장 '5대 핵심공약 인지도'

결과 인지총 34.7% (26.1%~38.7%) < 비인지총 65.3% (61.3%~73.9%)

① 안심소득으로 복지 사각지대 없는 서울	인지 38.7% < 비인지 61.3%
② 누구나 살고 싶은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인지 38.1% < 비인지 61.8%
③ 서울런으로 교육격차 해소. 교육사다리 실현	인지 31.9% < 비인지 68.1%
④ 공공의료로 보호받는 건강특별시 서울	인지 26.1% < 비인지 73.9%
⑤ 서울 전역을 수변감성도시로 조성 추진	인지 38.7% < 비인지 61.3%

③ 오세훈 시장 '5대 핵심공약' 중 가장 관심있는 공약

결과 1순위, 누구나 살고 싶은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20.3%
 2순위, 안심소득으로 복지 사각지대 없는 서울 18.2%
 3순위, 공공의료로 보호받는 건강특별시 서울 14.4%

① 누구나 살고 싶은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20.3%
② 안심소득으로 복지 사각지대 없는 서울	18.2%
③ 공공의료로 보호받는 건강특별시 서울	14.4%
④ 서울 전역을 수변감성도시로 조성 추진	13.7%
⑤ 서울런으로 교육격차 해소. 교육사다리 실현	10.2%
⑥ 잘모름/무응답	23.3%

④ 오세훈 시장 '5대 핵심공약' 추진 평가

결과 불만족 53.0% > 만족 40.8%

※ 오세훈 서울시장의 5가지 핵심공약 추진에 53.0%가 만족하지 않음(전혀 만족하지 않음 32.3% + 별로 만족하지 않음 20.7%)고 평가한 반면, 40.8%는 만족(매우 만족 16.0% + 조금 만족 24.8%)

	만족하지 않음(53.0%)	만족함(40.8%)
성별	남자(51.9%) > 여자(54.0%),	여자(38.9%) < 남자(42.8%),
연령별	40대(61.9%) 18-29세(56%) 60대 이상(55.5%)	60대 이상(49.1%),
권역별	서북권(60.7%)	동남권(43.8%), 도심권(43.4%),
서울생활만족별	불만족(83.7%)	만족(51.7%),
향후 시정운영 전망	나빠질 것(92.2%), 변화 없음(76.4%)	좋아질 것(86.2%)

* 도심권(용산구, 종로구, 중구), 동북권(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서북권(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서남권(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동남권(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⑤ 오세훈 시장의 향후 시정운영 전망

결과 좋아질 것 41.5% > 나빠질 것 31.5%

※ 서울시민들은 오세훈 시장의 향후 시정 운영에 대하여 41.5%가 좋아질 것(많이 좋아질 것 17.2% + 좋아질 것 24.3%)이라고 전망한 반면, 31.5%는 나빠질 것(매우 나빠질 것 13.3% + 나빠질 것 18.2%)이라고 전망함. 변화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25.1%,

	좋아질 것(41.5%)	나빠질 것(31.5%)
성별	여자(38.1%) < 남자(45.1%)	남자(30.8%) < 여자(32.1%),
연령별	50대(42.4%), 60대 이상(50.3%)	40대(42.2%), 18-29세(39.6%), 30대(38.4%)
권역별	동남권(44.1%), 도심권(42.8%)	서북권(41.7%), 서남권(35.7%)
서울생활만족별	만족(51.7%)	불만족(56.6%)
공약추진 평가	만족(87.7%)	불만족(54.8%)

○ 서울시민들은 오세훈 시장의 시정에 대해

-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과 연관성이 낮은 서울생활 만족도는 70.7%로 높았음
- 오세훈 시장의 5개 핵심공약의 인지도는 평균 인지층 34.7%(비인지층 65.3%)였음
- 오세훈 시장의 5대 핵심공약 중 가장 관심있는 공약은 '누구나 살고 싶은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20.3%), 안심소득으로 복지 사각지대 없는 서울(18.2%) 순이었음
- 오세훈 시장 5대 핵심공약 추진에 대해 불만족 53.0%(만족 40.8%)이 높았음
- 오세훈 시장의 향후 시정운영 전망에 좋아질 것 41.5%(나빠질 것 31.5%)로 낮은 수준
 - ※ 그러나 '변화 없을 것'이라는 응답자가 25%나 되고, 공약추진에 만족한 응답자의 11%와 불만족한 응답자의 36.3%가 선택했다는 점에서 향후 시정 전망에 냉담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수있음

3.1 주택분야

- 주택정책은 시민의 요구와 시장의 조건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에 맞춰 주택을 건설·공급하고, 실제로 주민이 입주하여 삶을 영위하며 정책 효과를 드러낼 때까지 정책인 장기적 관점으로 시행되어야 함
- 서울시의 2023년 주택정책은 아직 대부분이 출발선에서 계획단계로 점검하는 단계이며, 공약이행계획서의 '23년 실행 목표는 대부분 기본설계,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시범단지 선정 등으로 제시되어 있고, 최근 언론에 추진사항이 부분적으로 보도되고 있어 현 시점에서 판단할 수 있는 기대효과 및 이행과정에서의 특징을 중점적으로 판단함

빨리빨리

- 서울시 주택정책의 기조는 살만한 집을 더 많이, 더 빨리, 더 좋게 공급하겠다는 것임
 - 줄줄이 사탕처럼 이어지는 8개의 공약은 공약집의 가장 첫 장을 차지하고 있는 '누구나 살고 싶은 고품질 서울형 임대주택의'의 보조적 수단
 - '더 좋은 집을, 더 많이, 공급'하는 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문제는 '더 빨리'공급은 신속한 효과를 담보하지만 충분한 검토를 통해 예방이 가능한 문제들을 발생시킴
-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약 실현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 해제, 금융 규제 및 세제 완화를 공언했는데 이러한 조치는 필연적으로 주택시장에 큰 충격을 줄 것이고, 그 충격은 경제적 약자의 주거안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주택을 부의 축적 수단으로 능숙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들에게는 반가운 일이 될 가능성이 큼
 - 개발이익환수제의 효과에 대해 평가가 엇갈리는 현 상황에서 규제완화는 결국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기에, 사업 추진 과정, 특히 노후 임대주택 품질개선 등은 민간의 참여를 지양하고 SH공사가 주체가 된 공공의 책임하에 사업이 진행될 필요가 있음
 - 다만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다가 해제될 예정 지역에 잇따라 연장방침을 밝혀 해당 지역의 반발이 큰데 향후 서울시가 모순된 정책 기조를 얼마나 현실성과 합리성으로 조정할지는 미지수임

고급화 패러독스

- 더 좋은 집을 더 많이 '공급'하겠다는 정책 기조는 '수요층' 특히 '누구나 살고 싶지만 살 수 없는' 주거 취약계층은 배제될 가능성이 큼

- ‘누구나 살고 싶은 집은 아무나 살 수 없는’ 숨겨진 함정이 있는 데 서울시가 ‘서울형 주거면적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현재의 열악한 임대주택 환경을 개선하려는 시도를 하지만 어떤 재화든 품질향상은 높은 가격 책정으로 이어지며, 임대주택의 고급화 시도 또한 결국 더 높은 문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한 서울시의원은 이 같은 정책을 “시민들을 현혹하면서 주거취약계층을 정책 수혜 대상에서 배제시키는 사업”이라며 대책을 촉구했듯이, 무주택자에 대한 주거비 지원 확대, 장기임대주택 및 토지임대건물 분양주택, 공공주택 확대위한 공공택지 개발방식 개혁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전반적인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임
 - 열악한 임대주택 입주민의 직접적인 삶의 질 저하와 신분화가 사회문제로 표출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임대주택 고급화 방향은 장기적으로 옳은 시도로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주거 취약계층에게 그 혜택이 배분되지 지원이 강구되지 않는다면 걸만 번지르르한 보여주기식이자 또 다른 차별적 부동산정책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음
- 수년간 지속되던 가파른 집값 상승으로 서울에서 집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인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의 주택 공급 속도전은 필연적으로 큰 부작용을 동반할 수 밖에 없음
 -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집’의 확대는 장기적으로 필요하지만 주거 취약계층에게 안정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려는 서울시의 목표 달성에 이르기 위해서는 ‘누구나 살 수 있는 제도’를 병행하여 추진해야함.

3.2 균형발전분야

- 균형발전의 정의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 증진을 통하여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균형있는 발전(국립국어원)’
 - 「국가균형발전법」은 국가균형발전을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결국 균형발전이란 △지역 특색을 활용해 △지역 간 균등하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임
- 서울시의 경우 서울 내 각 자치구, 권역들이 나름의 강점을 활용해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도모하는 발전이란 면에서 현재의 서울시 균형발전 정책은 진정한 의미의 균형발전이 아닌 ‘균형이라 쓰고 토건이라 읽는’ 수준임
 - 지역을 막론하고 비슷한 사업이 우후죽순으로 진행되어 ‘균등’까지는 인정해줄 여지는 있으나 ‘지역 특색’을 고려하기보다는 너무 천편일률적이며 ‘삶의 질 향상’도 미지수임
 - 2023년, 서울시내 40여 개에 이르는 균형발전 공약은 다른 듯 닮아있음

공공자산 개발방향 최선인지 의문

- 공공자산 개발사업(서초동 국군사령부 부지, 금천구 공군부대 이전부지, 코레일 소유의 서

- 울역 북부 유희부지, 창동차량기지과 그 일대, 용산정비창 부지, 남부도로사업소 부지, 도봉면허사업장 이전부지, 수색역 차량기지, 구로차량 이전 등 공공 소유 부지 등)의 문제
- 저이용 공공시설 및 부지를 종전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공공자산을 활용방안에 대해 공공성을 견지하고 있는지, 지역민의 여론이 충분히 수렴되었는지, 시행 주체를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 특혜는 없었는지, 시 차원에서 향후 도시 개발 방향에 조응하는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음
 - 용도지역 상향으로 민간개발을 유도하는 공약사업이 14개(민간이 참여하는 개발사업의 면적은 3,495,071㎡)인데 ①민간업자에 대한 공공이익 퍼주기로 이어지지 않을지 ②개발사업에 대한 소식이 시장에서 확대재생산 되어 집값 거품을 떠받치는 등 현재 하락세인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부작용 ③각종 개발계획이 집값을 끌어올리는 신호탄이자 민간업자의 불로소득으로 변질될 가능성 등 강도 높은 개혁이 아닌 땅장사로 부채감축을 하겠다는 구태의연한 방식은 임시방편일 뿐이며, 알짜배기 자산의 활용방안에 대해 다른 대안이 없는지, 공공에 돌아갈 수 있는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였는지 등 진행단계에서 면밀하게 살펴보고 서울시민 모두를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재검토가 필요함

실현불가능성

- 실현이 가능할지 의문이 드는 공약들, 즉 우선 사업계획 시점과 관련하여 4차례 용지매각에 실패했던 상암 DMC 랜드마크타워와 첨단복합단지를 재추진하고 있으나 지난 6월 또 다시 신청자가 없어 매각은 유찰되었는데 이는 시장 및 경제여건 등이 사업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
 - BOO방식(Build-Operate- Ownership)으로 진행하는 수유차고지 복합개발사업 또한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아 민간참여가 불투명해지자 수익률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음
 -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을 의정부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바이오메디컬단지를 개발하겠다는 구상은 이전 예정지를 관할하는 의정부시의 변심으로 대체부지를 물색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와 유사하게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도 이전 예정지였던 광명시의 강력한 반대에 가로막혀 사실상 사업 철회 수순에 들어갔으며, 2012년 이미 한차례 무산된 바 있는 마포는 초고층 빌딩은 경기 악화 및 건설사의 유동성 악화로 사업자를 찾는 데에 난항이 예상되며, 국가상징 가로 조성 사업은 시행 전부터 막대한 예산 지출이 계획되어 있었음은 물론 시행 단계에서 계속된 추경 편성 및 예산 증액으로 이어져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의 세비가 지출될지 가늠할 수 없어 실현 가능성을 따지기 전에 우선 천문학적인 지출이 예상됨
- 오세훈 시장 임기 내 조성 완료 계획을 갖고 있는 사업은 40개 사업 중 5개에 불과하고, 대다수 사업들이 임기 후에 공사가 착공되거나 시행, 완료될 예정
 - 개발사업은 복잡한 절차와 갈등, 사전절차의 변수로 인해 긴 시간이 소요되기에 4년 임기 시장의 치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 하여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논의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함

부동산에 과도한 민간투자 유도

- 창동차량기지과 그 일대에 민간투자는 임기내 3,375억이지만 임기 후 4조 295억을, 수색역 철도 이전부지 복합개발에는 임기 후 3조라는 천문학적인 민간투자를 계획하고 있음
 - 민간투자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14개의 민간개발 유도 사업들을 포함하면 그 액수를 가늠하기도 어렵고, 개발요건을 완화해주면서 민간개발을 유도하는 사업들은 산업에 투자될 민간자금을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투기자금으로 만든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고, 또한 고금리로 인해 불안정한 경제적 여건으로 건설사들의 부실과 경제적 위기를 불러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해야함

사회적 갈등 유발

- 공약사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 간에 갈등이 진행 중인 사업도 많음
 - 지자체의 갈등을 제외하더라도 개발 예정지의 기존 입주상인, 사업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받을 인근 주민, 기존 용도 시설을 애용하던 시민 등의 성토가 보도되고 있음
 - 불광·연신내역 일대 개발사업의 일환인 서울혁신파크 부지 복합개발이 대표적인데, 기존에 지역사회의 공공재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서울혁신파크의 용도를 변경하는데 대해 인근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시민사회단체, 사회적 기업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동서울터미널 새 단장은 퇴거문제를 둘러싸고 기존 건물주인 HJ중공업과 입주상인들의 갈등의 지속, 마곡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도 복합쇼핑몰 계획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는 상인들이 반발 등이 있음
- 한편 '전임 시장 지우기'의 일환으로 의혹을 받는 사업들도 있는데, 국가 상징가로 조성사업으로 기존 '백년다리' 사업의 전면 백지화, 서울역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서울로7017' 또한 철거 위기를 맞았는데 철거 가능성에 대해 서울시 측은 "개장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고 당장 철거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서울로 7017' 보존을 전제로 구상안을 만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음
-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각 지역의 특성 요소가 사업에 배합될 필요가 있음에도 서울시의 균형발전 전략에는 그러한 노력은 보이지 않고 지역의 특성을 이용하기보다는 지역의 땅이나 건물을 통한 천편일률적인 복합개발이 공약집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음
 - 특정 지역이 아닌 도시 전반의 균등한 발전 꾀하는 일에는 장기적인 시야가 필요하며, 미래세대에 남겨야 할 것은 자연뿐만이 아니라 공간자원도 마찬가지임
 - 특정 계층과 집단의 개발 민원 목소리만이 아닌 미래세대와 전 시민의 요구를 아우를 수 있도록 생태적 이용과 안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하며, 아울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이 서울시의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함

3.3. 문화분야(문화연대)

-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의 총 244개 공약 중 문화(24개)·관광(2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실국 문화본부를 포함하고 있는 26개 공약을 평가
 - 오세훈 서울시정 문화분야 공약 전반의 특징은, 공약 대부분이 민선 8기 1년 차 사업에 지나지 않아 진행률이 낮고, 대형 문화시설 건립이나 관광을 통한 경제적 이익 창출에 무게를 두고 있는 사업이 대다수였음
 - 이에 문화분야 공약평가는 자율평가(오세훈 서울시정의 '문화'에 대한 관점과 공약 사업 내용에 문제를 제기하는 취지-문화분야 공약의 전반적인 특징 및 26개 공약 사업의 성격을 고려-문화시설, 주체 및 대상, 사업 및 프로그램, 지역 등 4개 항목을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공약을 분류·배치하여 평가)와 서울Watch의 기준(법률 조례를 위반하였거나 재개정 등 절차 미비, 기후위기-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부적절한 사업, 막무가내 개발로 미래가치를 훼손하는 공약, 정치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공약, 예산낭비가 발생하거나 목표달성이 어려운 공약) 중심으로 평가

[자율 평가] 오세훈 서울시정 문화분야 공약 분류 및 평가

- 2006.6 발표한 <비전 2015, 문화도시 서울>은 서울시 최초의 문화 분야 중장기 계획
 - 당시 문화정책은 인간소외와 삶의 질 문제 및 문화격차 해소 차원으로 문화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전개됐는데 이는 문화복지와 문화격차 완화 관점에서 나름의 성과를 가져왔지만, 많은 예산을 필요로 했고, 시설이 건립되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공급형-계층제적 구조라는 명확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음
- 최근에는 단순 문화인프라 확충만이 아니라 시민의 문화 활동이 수동적인 소비자에서 적극적인 문화생산자로 변화하면서 시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가 일상생활 공간에서 행해지는 것에 관심이 증대하고 있음
 - '시민'이 주체적으로 '문화 활동'을 수행하여 문화 활동의 '장'을 넓혀나가는 관점에 대한 정책 설계가 요구되고 있음
- 오세훈 서울시장의 문화분야 공약은 20여년 전 공급형 문화인프라 확충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시장주의적 관점으로 (관광 중심의) 경제적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대형 문화시설 건립과 같은 치적 사업에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음
 - 대형 문화시설 건립은 지역주민 및 시민과의 민주적 소통 절차 부재, 시설 건립의 타당성 미비, 인프라 확충을 위한 하향식 구조에 의해 수단화되는 자치구의 지역문화 정체성, 서울시민의 일상 및 생활 문화에 대한 고려 부재 등과 같은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발생 될 수 있음
 - 그 외에도 공약사업 참여자의 대상화(ex. 문화약자), 공약명만 명문화하고 실제 진행 내용이 없거나 현황을 확인하기 어려워 평가 자체를 할 수 없는 공약도 존재(동대문 일대 옥외광고물특구 지정 야간매출 증대 견인, 청년 중심 문화예술계 재도약을 위한 서울형

청년 문화패스 도입, 세종문화회관 리빌딩으로 차세대 문화플랫폼 조성, 청년 문화예술인 창작지원금 등 지원사업 확대, 서울광장을 책과 문화의 광장으로 조성, 서울역사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조성, 시립 서울미술관 건립으로 주민 문화향유기회 확대, 종로구 인사동 도심 전통문화예술지구 육성 지원, 종로구 대학로 공연문화 중심지로 재활성화 및 상권경쟁력 회복, 송파구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추진, 서대문구 김병주 도서관(북가좌동 가재울 뉴타운 서울시립도서관) 신속 건립, 강북구 수유동 강북문화원 리모델링)

[4개 항목으로 분류한 오세훈 서울시정 문화분야 공약 평가]

구분	평가 요약	관련 공약
문화시설 건립 관련 쟁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 문화시설 건립에 따른 개발 이슈 • 서울 이라는 대도시를 위해 대상화/수단화 되는 자치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들섬을 글로벌 예술섬으로 재조성 -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 잠실MICE복합문화공간 돔구장 조성 - 제2세종문화회관 조성 - 종로구 이건희 기증관 송현동 조속 건립 지원 - 정보사 부지, 문화예술복합타운 건립 - 강서구 서남권 문화예술 랜드마크 조성
공약의 주체 및 대상에 대한 점과 절차적 쟁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 및 시민과의 소통 부재(공급형-하향식 사업) • 문화약자라는 이름으로 주체를 대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비축기지 재정비 - 제2세종문화회관 조성 - 취약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 종로구 이건희 기증관 송현동 조속 건립 지원 - 송파구 풍납동 역사문화 중심도시 개발
경제적 이익 중심의 사업 및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관광)이익창출에만 편중하여 서울시민의 생활 및 일상 문화에 대한 고려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아트 랜드마크 조성(디자인서울2.0) - 종로구 이건희 기증관 송현동 조속 건립 지원 - 명동, 동대문, 남대문, 이태원, 홍대 등 관광특구 활성화
지역 불균형에 의한 격차 우려 및 타당성 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특정 지역 중심에 문화시설 건립 - 지역 격차 심화 우려 - 건립 타당성에 대한 근거 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로구 이건희 기증관 송현동 조속 건립 지원 - 복합시립도서관(동대문) 건립 추진 - 서대문구 김병주 도서관(북가좌동 가재울 뉴타운 서울시립도서관) 신속 건립 - 강서구 발산동 도서관 부지 복합 커뮤니케이션 추진

[지정 평가] 5가지 지표에 따른 오세훈 서울시정 문화분야 공약 평가

- 오세훈 시장의 문화분야 공약은 [자율 평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형 문화시설 건립’ 관련 공약들은 복합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
 - 대표적으로 ‘종로구 이건희 기증관 송현동 조속 건립 지원’은 송현동 내 국유지가 아닌 공간과의 ‘제도적, 행정적 협의 절차 미흡’, 송현동 부지가 지닌 문화적·생태적 가치 보존과 무관하게 ‘막무가내 개발’ 우려, 기증품의 검증 과정 미비와 이건희라는 명칭 사용에 따른 삼성 특혜 논란으로 인한 ‘정치사회적 갈등 유발’을 야기할 수 있음

○ 지속적인 감시 및 비판이 필요한 문화공약

- 오세훈 서울시장의 문화분야 공약들은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와 같이 서울시를 거대한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한 연장선상의 사업 목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특히나 앞서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 ‘대형 문화시설 건립’과 같은 공약들은 서울시 랜드마크화를 위한 주력 사업으로 예측됨
- 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화정책의 퇴행성과 서울 시민의 생활 및 일상에서 행사할 수 있는 문화적 권리 침해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공론화 및 시민의 관점에서 ‘문화 정책’의 수립 및 일방적 하향식 공급형 정책이 아닌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민주적·협력적 과정으로 만들어야 할 것임

[5개 지표에 따른 오세훈 서울시장 문화분야 공약 평가]

지표	관련 공약
법률 조례를 위반하였거나 재개정 등 절차 미비	- 세종문화회관 리빌딩으로 차세대 문화플랫폼 조성 - 청년 문화예술인 창작지원금 등 지원사업 확대 - 종로구 이건희 기증관 송현동 조속 건립 지원
기후위기-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부적절한 사업	- 노들섬을 글로벌 예술섬으로 재조성 - 잠실MICE복합문화공간 돔구장 조성 - 미디어아트 랜드마크 조성(디자인 서울 2.0) - 세종문화회관 리빌딩으로 차세대 문화플랫폼 조성 - 송파구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추진
막무가내 개발로 미래가치를 훼손하는 공약	- 노들섬을 글로벌 예술섬으로 재조성 - 종로구 이건희 기증관 송현동 조속 건립 지원 - 송파구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추진 - 정보사 부지, 문화예술복합타운 건립 - 명동, 동대문, 남대문, 이태원, 홍대 등 관광특구 활성화
정치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공약	- 제2세종문화회관 조성 - 미디어아트 랜드마크 조성(디자인 서울 2.0) - 청년 문화예술인 창작지원금 등 지원사업 확대 - 취약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 종로구 이건희 기증관 송현동 조속 건립 지원 - 명동, 동대문, 남대문, 이태원, 홍대 등 관광특구 활성화
예산낭비가 발생하거나 목표 달성이 어려운 공약	-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 미디어아트 랜드마크 조성(디자인 서울 2.0) - 세종문화회관 리빌딩으로 차세대 문화플랫폼 조성

3.4. 교통분야

- 오세훈 서울시장의 교통부문 공약은 전반적으로 도로 연장 및 확장, 지하화 등 건설사업에 집중되어있어 서울시의 난개발과도 연결되는 문제일 뿐 아니라, 환경이나 안전에 위협이 되어 지역주민의 건강권과 삶의 질 하락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오세훈 서울시장이 교통부문에서 가장 큰 방향성으로 잡고 있는 ‘간선도로 지하화 신속

추진, 지상구간 선형복합문화공간(동부간선도로, 강변북로, 경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서부간선도로, 용마산로), 서울시 지상철도 전구간 장기적 지하화'로 크게 분류할 수 있음

- 간선도로 지하화와 지상구간의 선형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의 경우, 지상에 도로를 건설하는 것에 비해 더 막대한 건설비가 소요될 뿐 아니라, 터널, 지하차도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지자체 재정만으로는 막대한 유지·보수 관리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민간 자본을 유치할 수밖에 없게 됨
 - 이는 도로 유료화로 이어져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통행료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도로나 철도를 지하화할 경우 전력사용 및 자동차 배출가스의 밀집으로 인해 지하공간의 대기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별도의 환기 장치 설치로 인해 환기시설 주변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됨
 - 따라서 지하화 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할 뿐 아니라, 지반문제 등 장소마다 각각의 영향평거나 지질조사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없으며, 홍수·화재·붕괴사고, 지하수 유출 등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는 일반 도로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높기에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은평구 은평새길 건설사업 역시 이미 은평새길 구간에서 세 개의 터널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그곳에 2개의 터널을 추가로 건설해 교통량을 분산시키겠다는 것은 심각한 대기오염이 예상될 뿐 아니라 북한산 국립공원의 경관과 생태계 훼손을 유발할 것임
 - 또한 이 사업은 자하문길, 검정길 등에 교통대란을 야기하고 종로구 주요 도로 및 도심 전역에 교통체증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되어 시민들이 반대해 왔으며, 전문가들 역시 은평새길의 종점부인 부암동에서 경복궁 구간의 도로교통 용량에 한계가 있어 새로운 교통 혼잡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은평뉴타운, 삼송 택지지역 주민들과 종로구 주민들 간에 수년동안 갈등이 있었던 사안임에도 이에 대한 대책없이 일방적인 사업계획 추진으로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있음
- 이와같이 굵직한 문제 공약들 뿐 아니라, '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법 개정'의 경우 예산 및 경제성, 시민공감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실현 불가능하고, '원효로 UAM 신교통수단 거점 조성'공약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라 비행금지구역 문제가 제기되어 실현 가능성조차 없을 뿐 아니라, '수서역 환승주차장 부지 첨단 복합화'나 '서울 로봇테크센터 조성 사업'은 형태가 잡혀있으나 계획이나 실행방안이 뚜렷하지 않아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러 공약들은 서울시민의 교통불편 해소에 초점을 맞추기는 했으나 수서역 환승주차장 부지 첨단 복합화, 강서구 김포공항 미래신교통 거점조성[UAM], 동대문구 장안동 물류터널을 복합편의시설로 등 각 지역단위 별로 건설사업을 통해 경제거점을 배치하는 것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이에 따른 서울시민의 일상생활과 이동권 보장, 친환경적 교통수단으로의 전환

등과 어떻게 복합적으로 운영해가고 발전시켜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안은 없음

- 즉, 대중교통 인프라나 서비스 개선, 보행과 자전거 이용의 확대 등과 같은 공약들이 마련되어 수송부문에서 필요한 탄소중립의 일상적인 실천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하나 이와 관련해서는 전무한 실정이며, 일부 '천호대로 및 공항대로 자전거도로 구축' 공약이 포함되어있지만 자전거 이용자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하지 않은 채 신규도로 건설 계획만을 내놓고 있을 뿐임
- 이제는 유럽뿐 아니라, 자동차의 나라라고 불리는 미국에서조차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는 교통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음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후위기에 대한 후진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으며, 서울시가 시대상황에 부합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반한 교통정책을 수행하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함

3.5. 돌봄·복지·건강분야

- 서울시의 돌봄·복지·건강분야 공약은 오세훈 시장이 표방한 '약자와의 동행'을 담고 있는 분야로, 2023년도 사회복지 예산은 서울시 예산의 38.4%를 차지하는 16조원에 달하며 (22년 36.3%, 14조 2천억원/ 21년도 36.9% 13조 6백억원) 매년 비중이 높아져 가고 있음
 - 따라서 절대적인 양적 증가에 따른 불필요한 요소를 재구성하고 효과적인 전달체계와 사업 우선순위의 재설정이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중복으로 인한 예산과 행정력 낭비

- 오세훈 시장의 복지분야 공약사업 중 '약자와의 동행'의 대표적 사업인 '안심소득 시범사업(5대 핵심공약)'은 기본소득에 대한 대응적 논란이 있었고 시범사업 이후 실행불가능한 정책실행 권한이 없는 시범사업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수급제도'에 비해 진일보한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사업으로 볼수있음
 - 시의회에서 제기되었던 시범사업 참여가구의 표본이 부족했던 점도 23년부터 2배 확대하여 부분적으로 보완되었음
 - 그러나 임기 내 500억이라는 적지않은 예산이 투입될 이 실험이 국가단위가 아닌 지자체 단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면서 그 한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그 적절성에 의문이 있으며, 선별과정에서의 행정비용, 타 복지급여와 지원금 등과의 설계 고려, 지자체별 소득, 생활격차에 따른 여러 조건을 감안한 실험이 아닌 서울지역 저소득자만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 효과성과 노동활동 상관관계, 심리적 안정성 정도의 의미를 담은 반쪽짜리 실험이 될 공산이 있음
- 오세훈 시장의 돌봄·복지·건강분야 공약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기존에 유사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기존의 사업을 계승·발전시키기 보다는 별도의 사업이나 기구를 만들어 서비스 전달체계의 중복과 혼란 야기하는 예산낭비가 발생하고 있는 것임

- 오세훈 시장이 시작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사업들은 돌봄영역에서 중복 시행되는 것이 대표적이며, 병원안심동행서비스, 안심마을 보안관, 상담멘토링프로그램, 전월세 안심계약도움서비스 등 추진하는 대부분의 사업들은 기존의 서울시 조직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임
 - 병원안심동행서비스는 어르신복지과의 어르신 안심 병원동행 사업과 안심돌봄복지과의 사회서비스원 돌봄SOS센터를 통해 유사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안심마을 보안관 사업은 스카우트·자율방범대·자치경찰총괄과의 주민참여 자치경찰 치안정책 사업과 중복되며, 상담멘토링프로그램은 미래청년기획단(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찾아가는 복지상담소·50플러스재단의 사회공헌일자리사업들에서 유사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전월세안심계약도움 서비스는 행태가 조금 다르기는 하나 주거복지센터와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우리동네돌봄단(임기 내 272억)사업은 사회적 고립 1인가구의 단순안부를 묻는 활동(주3일, 1일 4시간 이내)을 하는 1,200명의 인건비가 주를 이루는 공공일자리사업에 가깝고, 이러한 방문돌봄서비스는 복지정책실의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사업·지역기반 복지공동체 구축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찾아가는 복지활성화 사업의 찾동 방문인력·AI안부확인·스마트 플러그·서울살피미 앱까지 더 효과적·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당선되자마자 출연기관과 민간위탁기관이 많아 줄여야 한다던 오세훈시장은 본인의 공약 사업을 위해서는 부서별로 산개한 사업들을 통합하지 않고 1인가구지원처럼 또 하나의 전달체계를 만들어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데 향후 서로 다른 부서의 유사한 사업들을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로 정비하고 연관 서비스들 간의 연계로 효과성을 높이는 개선이 필요함.

인기영합하는 과도한 공약확대

- 키즈카페는 원래 100곳을 공약목표로 정했으나 저렴하고 새로운 시설에 호응이 높아 400곳으로 늘리겠다고 발표 하였음
- 하지만 400곳에 달하는 키즈카페를 만들만한 유휴공간이 서울시와 자치구 내에 턱없이 부족하여 시설조성을 위해 빈공간을 찾아 기존 주차장이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조성하여 시민들의 활용도를 떨어뜨리고 있고, 기존 공간을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하여 복합시설로 만들고 있거나 이마저도 부족하여 안타깝게도 푸른도시국은 공원 내에 키즈카페를 작년과 올해 16개소를 설치하고 있음
- 키즈카페의 확대는 연 400개가 넘는 어린이집들이 폐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과 함께 육아와 돌봄시설이 발맞춰 나가지 않을 경우 몇년 지나지 않아 다시 재정을 투입해 공간을 변경하게 될 위험이 있는 포퓰리즘적인 정책으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며, 키즈카페 이용을 위해서 보호자 동행이 필수라는 점에서 한부모가정이나 맞벌이 부부에게는 혜택이 돌아가기 어려운데 키즈카페의 과도한 확대는 '약자와의 동행'의 기초와도 어울리지 않음

- 비슷한 건강분야 공약사업인 구립 서초복합복지타운SOC, 도봉구 쌍문동 구민체육센터, 강동구 제2구민체육센터 등을 비롯한 체육시설들,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센터 등도 공원을 비롯한 녹지공간들을 훼손하며 조성되고 있어 과도한 공약 확장이 서울시민의 휴식공간이자 기후위기 문제에 반하는 예산들로 귀결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사업효과를 장담할 수 없는 공약

- 모아어린이집 100개 공동체 확대 공약은 현재 연간 400-450개가 폐원하는 상황으로 인해 어린이집의 접근성이 떨어져 보육기반이 취약해지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가정어린이집을 묶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공립어린이집에 집중되는 보육수요를 분산하는 사업
 - 이를 통해 민간어린이집의 폐원을 막아 보육기반을 유지하고자 하지만 모아어린이집을 신청하는 44%가 국공립 어린이집이 차지하고 있고 입소대기 중인 아동의 모아어린이집 입소도 의도한 사업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어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결국 국공립어린이집과 일부 민간어린이집에 과도한 인센티브만 제공하게 될 위험성이 있음
- 오세훈 시장이 유럽출장에서 서울시의 혁신적인 사업으로 이야기 했던 '손목닥터 9988'은 시작부터 논란이 있었는데 납품업체 중 한군데는 주가조작 의료기기업체였고, 유사 스마트폰밴드보다 비싼가격임에도 성능 만족도는 낮았음
 - 앱에 대한 평가도 안드로이드 1.9, 애플 1.4일 만큼 불안정 하며,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주는 포인트는 사용이 어려워 실효성이 낮고, 급하게 시행하면서 근거 조례를 만들지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1억원을 들여 기기를 회수해서 재활용 교부하는하고, 21년 지급한 5만명(22,615개 회수+대여연장)의 연령대는 건강관리가 취약하다고 볼 수 없는 30-40대가 주를 이루어 선심성 사업의 표본이 되고 있음
- 서울 곳곳에서 효과를 알 수 없는 운동기구 들이 운동의 효과를 체감할 어르신들의 접근성이 낮은 '서울형 어르신 놀이터 조성사업'은 일상적 활동공간과 떨어진 외진 공간이나 항상 햇볕과 비바람에 노출되어 있는 놀이터 등 곳곳에 설치되어 실효성이 의문시 됨
- 스마트폰의 유튜브를 끼고 생활하며, 영상편집과 스트리밍 방송까지 하는 어르신들을 볼 때 디지털 소외는 연령으로만 구분되지는 않음에도 서울시는 디지털기기 상담과 교육할 수 있는 디지털플라자를 조성하고 어르신간 1:1 교육할 수 있도록 어디나지원단을 조직하고 활동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복지관, 경로당, 주민센터를 찾아가 체험형 교육을 하는 디지털 강사도 246명을 채용하고, 디지털안내사 100명은 공원·산책로·대형미트·프렌차이즈 음식점을 돌며 디지털 기기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경로당을 스마트하게 꾸미고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등 과도한 측면이 있음
 - 스마트폰이나 키호스크처럼 널리 보급되고 접하는 기회가 많아질수록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어르신들이 홀로 방에 앉아 있기보다는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문화

와 공간을 마련하는 정책방향으로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6. 교육분야

- 오세훈 시장의 교육분야 공약은 취·창업을 위한 평생교육,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교육사다리 복원, 문화예술 교육기반 확대 등 3가지로 분류할수 있음
- ‘약자와의 동행’에 기반한 교육사다리 복원 사업들 중 5대 핵심공약에 포함된 서울런 공약사업은 시행초기부터 수십 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서울교육청이라는 시스템과 배치 및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방향성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서울런이 대표 교육공약사업인 만큼 빠른 속도의 사업진행과 목표달성을 위해 22년의 사업진행인 기본적인 절차인 사업근거 마저 갖추지 않은 채 진행되었음
 - 서울런사업은 22년은 지방자치법 제9조 2항 제2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와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전지원에 관한 조례 제 4조(생활안정 지원의 대상)을 근거로 시범사업 명목하에 진행하였으나 22년 74억 9천만원의 과도한 예산을 법적근거 없이 사용한 점은 분명하며,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타당성 및 기존 제도와 관계, 운영방안들을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하는데 이는 22년 8월 30일에 이루어졌고 서울런 사업 대상자와 지원을 규정한 조례는 22년 12월 30일에서야 공포되었음
 - 저소득층 학생에게 유명강사의 강의를 제공하는 사업은 콘텐츠 제공측면에서 EBS (<https://www.ebsi.co.kr>)가 현재 기초부터 심화학습까지 수준별 맞춤형 강좌 1만 7천여 편을 제작하여 자기주도학습을 지원(누구나 무료로 수강 가능,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학습콘텐츠 기반 학습지원서비스(멘토링 서비스)를 운영)하고, 17개 시도교육청이 함께 운영하는 e학습터(<https://cls1.edunet.net>)도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율학습방과 자율평가 등 다양한 학습자료로 자기주도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학습콘텐츠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중복성으로 인한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음
 - 전문가들은 교육콘텐츠 보다는 콘텐츠들을 자신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지속적인 학습동기를 지원해 줄 조력자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한 점에서는 멘토링 사업은 유효성을 일정하게 확보했다고 볼 수 있으나 이 또한 서울시교육청의 AI 맞춤형 학습과 함께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대학생 멘토링 랜선야학이나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서울동행 프로그램 등에서 유사한 사업이 진행중임을 볼 때 서울시의 역할은 막대한 콘텐츠 비용을 민간기업에 투입하는 것이 아닌 서울시교육청 및 관련 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효과성을 높이는 검토가 필요함
- 오세훈 시장의 ‘취업과 창업에 몰두한 평생교육’ 공약들은 4차 산업시대와 AI의 급격한 발전, 로봇서비스 등을 지켜보면서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감과 실업의 공포를 동시에 체감하는 현실에서 필요한 정책으로 평가되지만 서울런과 마찬가지로 민간영역에서 수만 혼 콘텐츠들이 넘쳐나는 현실임

- 40-50대를 위한 서울런 홈페이지에는 미네르바형 직무교육 콘텐츠는 최근에만 404개가 업로드 되었고,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리더십/ 창업/ 1인 콘텐츠-영상-오디오 제작/ OTT분야 직무/게임산업/ AR-VR제작실무 등 지속적인 강좌를 업데이트하지만 이미 전문적이고 유사한 사이트와 콘텐츠들이 더 많음(교수학습자료 공동활용체제인 KOCW(<http://www.kocw.net>), 2014년에 오픈한 국가 학습포털인 늘배움(<http://www.lifelongedu.go.kr>), K-MOOK(<http://www.kmooc.kr/>)는 2015년 시작하여 대학 공공기관 및 해외기관 170여개가 참여하고 있고 수강신청자 280만명을 넘어선 사이트가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 누구나 원하는 강좌를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온라인 공개 강좌 서비스는 학점과 학위도 취득할 수 있음)
 - 서울시는 많은 예산을 사기업에 투여해 재취업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중복되는 콘텐츠 나열할 것이 아니라 잠재적 미래 직업시장에 대한 정보제공, 실직위기의 노동자들이 선호하는 재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필요 기술과 역량을 갖출 수 있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이를 컨설팅 해줄 전문가들과의 상담을 주선하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판단되며, 무엇보다 이러한 재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지원제도 마련 등 현장 중심의 정책을 더 강구해야 함
 - 특히, 서울시는 이 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 평생교육의 시스템을 통해 취업과 창업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현장을 더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예술문화기반 확대 조성사업들은 오세훈 시장의 취임하기 수년 전부터 계획되고 상당한 진척이 이루어진 사업들로서 돌이키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예산을 낭비하게 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공약사업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3.7. 환경분야

- 오세훈 시장의 환경부문 공약 28개 중 기후·교통 분야와 관련된 공약은 3개로 기후위기 해소를 위해선 매우 빈약함
- 친환경교통 선도도시 공약은 2026년까지 전기차 충전기 22만기 보급, 배달 전용 오토바이 및 택배화물차 100% 전기차 교체 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는 국가 탄소중립 정책의 무공해차 전환정책의 일환으로 보이지만, 전과정 평가 시 온실가스 배출과 지속불가능한 에너지 생산구조를 고려할 때 유의미한 기후공약으로 보기 어려움
- 공공자전거 따릉이 시즌2의 경우 서울시의 대표적 대안교통수단인 따릉이를 4만5천대까지 확대하는 등, 누구나 공공자전거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운영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이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따릉이 요금 인상 및 이용권 개편이 추진되며 이용권 가격이 두 배로 상승하고 이용권 종류가 단순해지는 등 시민들의 부담은 높아질

것으로 이용자의 감소가 전망되는 데 서울시는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해 탄소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공공교통수단으로서 따릉이를 인식할 필요가 있음

- 자원순환 공약 중 서울시가 △제로웨이스트 서울 프로젝트 확대 공약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제로마켓 사업의 경우 제로웨이스트샵, 무포장 가게 등을 확대하기 위해 신규매장 50곳, 기존매장 50곳, 프랜차이즈 기업 100곳을 선정하여 250만원씩 지원할 계획임
 - 서울시는 서울에 제로마켓이 잘 자리 잡게 지원하기보다 사업확대를 위해 더 많은 매장을 지원한다는 기조로 프랜차이즈 매장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음
 - 현재 서울의 제로웨이스트샵은 개인이 운영하는 매장이 대부분이고, 이들이 실질적으로 마을의 자원순환 거점으로서 역할을 고려하면 프랜차이즈 매장을 중심으로 지원이 확대된다면 마을단위의 자원순환 흐름이 흔들릴 우려가 있음
- 플라스틱 재활용률 제고 공약은 플라스틱 열분해 관련 민간기업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를 26년까지 200대 설치한다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데, 투명페트병의 B2B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인회수기 설치 이전에 가정에서 배출되는 투명페트병의 별도 분리배출 제도가 먼저 안착되어야 함.
- 공원 및 녹지에 관한 공약은 18개로, 공원 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한 것이 대부분이다. 도시공원은 도시민의 삶의 질,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도시기반시설로서 자연환경의 보전과 도시민의 여가 활용에 기여하지만,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1인당 도보생활권 공원면적을 비교하면 가장 높은 자치구(종로구 19.68㎡)와 가장 낮은 자치구(금천구 2.3㎡) 사이에는 약8.5배의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이기에 바람직한 목표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공원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제시한 방법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 서울시의 공원녹지 확대 전략은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대신 공공기여를 받아서 녹지공간을 확충하는 것, 한강과 지천변의 이용공간을 확대하는 것, 그리고 공원 기능을 고도화하는 것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서울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공약은 서울 도심권의 건축 규제를 완화하여 고밀·복합개발을 추진하고,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여 규제완화를 대가로 얻는 공공기여를 공원녹지 조성에 투여해 서울 도심의 녹지율을 3.7%에서 15%까지 끌어 올리는 것이 목표인데 단절·사유화된 녹지조성 방식에서 벗어나 개방적이고 생태적 활력이 넘치는 녹지조성을 유도한다고 하지만 높아진 빌딩숲에 경관이 가려지면 개방감도 활력도 낮아지고 오히려 주변경관을 조망할 수 없어진 빌딩숲에서 시민들의 고립감을 키울 우려가 있고, 충분한 개발이익 환수장치와 원주민에 대한 주거 안정 대책이 함께 제시되지 않으면 민간사업자들에게 막대한 불로소득을 안겨주며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음
 - 한강과 지천변의 이용공간을 확대하는 서울 전역을 수변감성도시로 조성 추진의 경우 홍제천, 정릉천, 도림천 등 서울 곳곳의 하천 경계부의 유희부지를 활용해 도시 미관을 살리겠다는 취지이지만 중랑천 상류 등 일부 사업 구역이 생태계보호구역에 위치하여 생태계 교란이 예상되며, 한강과 지천변의 유희부지가 많아 보이는 것은 비가 많이 올

때 불어난 유량을 감당하기 위해서인데 자꾸만 이용공간을 확대하며 불투수 면적을 늘린다면 홍수와 가뭄 같은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 도시의 회복력과 탄력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음

- 또한 성동구 중랑천 정비 공약은 생태서식지 조성 및 조류 관찰대 설치, 테마광장 조성 등 친수문화공간을 만들어 하천을 공원화 계획인데 통수단면적 증대와 오염 저감의 일환으로 280만톤에 달하는 모래를 새 모래로 교체하려는 계획으로 인해 다양한 야생생물들의 서식지가 파괴될 것이 우려가 있음

○ 공원 기능을 고도화를 위한 서대문지역 대형공원(백련산 일대) 조성, 동대문구 배봉산 치유의 숲길 조성 등 공약은 이미 빌딩숲이 빼곡한 서울에서 새로운 공원을 만들기는 어려우니 기존 공원에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여가 기능을 고도화하는 방식

- 서대문지역 대형공원(백련산 일대) 조성 공약의 경우 서대문구 백련근린공원을 테마형 복합힐링공원으로 재정비하는 계획은 기존의 자연숲을 베어내고 산수유, 뽕나무 등 경관숲을 조성한다는 계획과 무장애데크길, 휴게쉼터, 전망대, 자락길 설치 등 산지형 공원의 과도한 시설화로 공원 내 생태계 교란이 우려되며
- 동대문구 배봉산 치유의 숲길 조성 공약의 경우에도 배봉산에 서울형 치유의 숲길을 조성하며 기존 숲을 벌목하고 데크길을 설치하는 등 환경영향이 우려되며, 경관숲 조성, 데크길, 전망대 설치 같은 편의성만을 위한 개발이 아닌 온전히 산림을 거닐고, 숲에서 휴식하는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함

○ 공원의 다원적 가치를 저해하는 공약들도 심히 우려되는 데

-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재조성 공약의 경우 여의도공원 공간을 재편하여 한강변 랜드마크 문화시설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하 보행네트워크 등을 했는 데 사업 대상지 내 수목은 최대한 이식하여 생태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지만 성목을 이식할 경우 고사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목 이식은 최선이 아니며
- 제2세종문화회관이 여의도공원에 건립되는 것에 대한 입지적 타당성 검토없이 사업대상지가 급작스럽게 변경되며 주민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으며
- 종로구 송현동 녹지공간 개방 공약도 생태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었던 송현동 부지에 가)이건희 기증관 건립을 결정하면서 공원 하부 지하공간에 관광버스 주차장 50면을 포함하는 450면 규모의 통합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을 수립하였는 데 이는 지하개발로 인해 지상부 수목에 미칠 악영향과 토양탄소 유실도 우려되지만, 공원과 문화시설이 이미 적지 않은 종로구에 가)이건희 기증관을 건립하는 것이 공원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어떻게 기여할지도 의문임

○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는 이미 오래전에 현실이 되었는데 오세훈 시장은 성장주의 개발 환상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기후위기 시대 회복력과 탄성을 담보하는 공원을 개발하고, 몇가지 보여주기식 환경공약 제시로는 오늘날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움

- 단순히 여가시설과 랜드마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 녹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고, 폐플라스틱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업 협력보다 서울시 전체 쓰

레기 총량 관리를 위한 로드맵이 시급하며, 기후·생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서울시의 중장기적인 비전을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적극적인 전환이 필요함

3.8. 경제분야

- 오세훈 서울시장의 경제공약을 대표할 수 있는 단어는 혁신, 개발, 육성으로 볼수 있으며, 서울시가 대표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을 특정 지역을 특구 형태로 지정하고 그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과 인재를 육성하는 것임
 - 오세훈 시장의 경제공약은 27개(세부공약 68개)로 구성되어 있고, 서울시의 산업 육성과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반 마련으로 요약할 수 있음

10개 산업 특구를 통한 개발계획의 극대화

- 10대 혁신산업 거점 및 디지털산업 생태계 조성 공약은 현재 운영중인 지구(양재, 홍릉, 마포, 동대문, dmc 등)와 계획 중인 지구(여의도, 수서, 용산, 구로, 마곡, 잠실)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공약의 주요 지구 계획과 각 지구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등을 통해한 인재 양성까지를 포함하고 있음
- 혁신지구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사업분야를 성장시키겠다는 공약의 실제 내용은 주요 위치에 다양한 센터 건립이나 혁신지구 개발계획으로 10개 혁신지구에는 모두 센터 건립이 계획되어 있고, 여의도와 잠실은 지역의 대규모 개발계획과 연계되어 있음(여의도의 노후 단지 11개 지역을 재개발하고 그 중 일부를 진흥지구 및 외국인 학교 유치를 위한 기부채납을 유도하고 있음)
 - 잠실 MICE는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사전 심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일부 지역의 경우는 하천구역 점용으로 인해 환경문제를 먼저 해결해야만 하며, 계획단계 혁신지구는 오세훈 시장의 임기 내에 완료가 어려운 단계에 있음

기존 사업에 공약 덮어씌우기

- 혁신지구 활성화 공약과 문화예술과 K-컬처산업의 연계지원 공약은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공약으로 덮어씌운 것으로 보임
 - 서울시네마테크 건립, 서울큐브 조성, 남산 실감형 스튜디오 조성(구 남산창작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계획을 세워 오세훈 시장의 임기 내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던 사업인데, 현재 공약과 2023년 사업설명서를 비교할 때 기존 사업계획의 변경은 발견되지 않았음.
 - 홍릉 및 마포, 양재 지구의 경우도 교육기관을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고, 동대문의 경우도 기존 패션지구에 '뷰티'산업을 끼워넣기 하고 있음.

서울시민 하지마라 공약 :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시민참여 메타버스 서울 구축'

- 이 공약은 코로나19 시기 비대면 방식의 확대와 함께 디지털 환경의 활용을 위해 서울시가 운영하는 메타버스 공간을 지원하는 것임
 - 현재 매년 20억원이 넘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나 하루 방문객은 400명에 불과
 - 메타버스를 통한 민원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그를 위해서는 또 다른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 등 실제 이용자들의 불편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해 2023년 5월 시의회에서도 시민의 만족도가 낮고 이용자가 적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채 운영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었음.

-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메타버스를 운영했지만 2023년 현재는 거의 폐기 상태에 이르고 있으며, 서울시의회의 경우도 메타버스 운영을 계획했지만 전면 폐기되어 전액 불용되기도 하였음
 -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는 오히려 예산을 증액하여 본 사업을 확대하려 하지만 전면 재검토가 필요함.

4 공약의 지표별 평가

○ 공약의 평가지표

- 오세훈 시장의 「민선 8기 공약실천계획서」에 제시된 공약을 평가하기 위하여 서울 Watch와 문화연대는 공약 평가 기준을 작성함
- 통상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취임 첫 1년은 공약의 적실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1)개별 공약들의 종합적인 평가 (2) 1년간의 공약이행 과정의 문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체 평가기준을 마련하였음

○ 공약 평가의 지표는 6가지 분야로 구성하였음

- | | |
|----------------------|------------------|
| ① 법률/조례 위반·재개정 절차 미비 | ② 기후위기·양극화 심화 사업 |
| ③ 막무가내 개발로 미래가치 훼손 | ④ 정치사회적 갈등 유발 |
| ⑤ 예산낭비 발생·목표달성 어려움 | ⑥ 계획 부실 및 미비 |

[공약의 지표별 평가 결과]

- 공약의 지표별 평가 중 예산낭비 발생·목표 달성 어려움(21%), 기후위기·양극화를 심화하는 사업(19.7%), 정치/사회적 갈등을 유발(19.0%) 순으로 나타났음
- 분야별로는 환경(20.4%), 문화(19.7%), 균형발전(16.4%) 순이었음

[지표]	합계 (%)	주택	균형 발전	문화	관광	교통	환경	돌봄	복지	건강	교육
법률/조례 위반·재개정 절차 미비	16 (10.5%)	1	1	3		2	2	1	3	1	2
기후위기·양극화 심화하는 사업	30 (19.7%)	2	4	5		3	11		1	4	
막무가내 개발로 미래가치 훼손	26 (17.1%)	1	7	8	1	1	8				
정치/사회적 갈등 유발	29 (19.0%)		7	6	2	3	6	2	3		
예산낭비 발생·목표 달성 어려움	32 (21.0%)	2	5	3		4	1	3	8	3	3
계획 부실 및 미비	19 (12.5%)	1	1	5		4	3		1	1	3
합계(%)	152 (100%)	7 (4.6%)	25 (16.4%)	30 (19.7%)	3 (1.9%)	17 (11.2%)	31 (20.4%)	6 (3.9%)	16 (10.5%)	9 (5.9%)	8 (5.3%)

① 법률 조례를 위반, 재개정 등 절차 미비

공약번호	공약사업명	공약사업 이행평가
01-01	누구나 살고 싶은 고품질 서울형 임대주택	공공주택 관리 및 공공기관 임대주택 공급상 규제 등으로 인해 분양, 임대주택 간 혼합단지 구성이 어려운 상황이며, 서울시 단독 해결 어려움
02-05	노원구 창동차량기지 지역경제활성화시설로 신속 추진	도시철도법 개정 필요(창동차량기지와 진접차량기지 간 무상귀속 가능해야 정상적인 사업추진 가능)
04-09	세종문화회관 리빌딩으로 차세대 문화플랫폼 조성	예산편성 전 이행하여야 할 사전 절차 누락 사업근거로 제시한 3개 조항 타당 여부 확인필요
04-10	청년 문화예술인 창작지원금 등 지원사업 확대	[서울특별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강행 규정, 시행계획 수립 부재한 치적성 일회성 사업
04-16	종로구 이건희 기증관 송현동 조속 건립 지원	대한항공 소유 송현동 57번지 (송현동 옆 카페 갤러리 공간으로 송현동 내 유일하게 국유지가 아닌 공간)와 사전 협의 없이 토지 활용 계획 수립, 토지 맞교환 이전에 서울시 공익사업에 대한 보상절차를 진행 계획 / 행정 절차 미흡
06-03	서울시 지상철도 전구간 장기적 지하화, 지상구간은 선형복합문화공간 조성	특별법 개정에 의한 구체적 근거가 미비
06-20	동작구 이수~과천 복합터널 추진	정부가 추진중인 빗물터널의 경우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설계 강우 기준 50년 빈도의 '영구 구조물'로 설정되어 있지만, 서울시 「이수~과천 복합터널사업」은 하천법에 근거한 설계 강우 30년 기준의 '방수로'로 공고해 설계 까지 완료. 실시협약 체결 단계에서 설계 강우빈도를 30년에서 50년으로 변경하는 협상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짐
07-02	서울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서울시가 주장하는 화이트사이트, 2040 도시기본계획안에 담긴 비온드조닝 등 민간사업자에게 까지 개발규제 등을 폭넓게 완화하기 위해서는 '도심 복합개발 특례법' 제정 필요. 서울시가 관련TF를 작년부턴 운영하고 있지만, 특례법 제정은 담보중인 상태로 공약 추진 어려움.
07-23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재조성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도 진행된 바 없으며, 계획에 맞춰 추진하기 위해선 타당성 조사 및 중앙투자심사 등 사전 절차 이행시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필요로 함.
08-03	모아어린이집 100개 공동체 확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8의3) 개정 필요, 현 입소우선권은 상위연령반 진학시, 반이 없어 타 어린이집 이동 필요 시 우선권, 공동체 내 어린이집 간 이동 시 어린이집 입소우선권 부여 협의 필요
09-01	&안심소득&으로 복지사각지대 없는 서울	제도에 대한 권한 없는 시범사업
09-04	장애인 버스요금 무료 추진	장애인 버스감면 규정 신설 위한 서울특별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개정 필요
09-21	시립 공공실버타운 조성	(국토부)공공주택 입주자 자격기준 자치단체장이 입주자 기준 설정할 수 있는 권한 부여 필요
10-02	스마트 건강관리 '손목닥터9988'	반환되지 않은 스마트밴드는 사실상 기부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11-01	&서울런&으로 교육격차 해소, 교육 사다리 실현	중위소득 85% 확대 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 필요, 시상과 경품제공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해당 법적논쟁
11-07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대상 평생학습 장학금 통한 학비 보조추진	조례 개정 및 신청자격확인 위한 행정정보 유통서비스,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필요

②기후위기-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사업

공약번호	공약사업명	공약사업 이행평가
01-01	누구나 살고 싶은 고품질 서울형 임대주택	고품질화로 인한 임대료 증가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역 축소 우려
01-02	재개발·재건축 신속통합기획 확대 및 쾌속 추진	신속통합기획 정비구역 선정 시 해당 구역 투기 성행 우려 (서울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유지 등 고안, 실행)
02-14	용산국제업무지구 중심 新용산시대 신도심조성	부동산 급격한 가격상승 요인으로 취약계층 주거 위협, 인근 상인 젠트리피케이션 유발 우려
02-18	미아 역세권 활성화 사업 랜드마크 추진	수익성 제고 명목으로 시행사의 높은 분양가 책정. 원주민과 기존 상인 배제, 사업자 이익 보장으로 지역활성화 취지 왜곡
02-27	용산구 서울역 역세권 개발	1조6억 규모 사업으로 투기수요 유발 가능성과 특혜 의혹
02-36	노원구 태릉골프장 개발계획 전면 재검토	극심한 교통체증 유발·미세먼지 증가로 주민 건강권 위협, 멸종위기종 야생동물의 서식지 파괴 등 자연생태환경 파괴와 그린벨트 훼손, 조선왕릉 태릉강릉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취소 우려
04-01	노들섬을 글로벌 예술섬으로 재조성	노들섬 서식 조류, 생물들의 서식처 파괴 우려
04-03	잠실 MICE 복합문화공간 돔구장 조성	전시 행사에 의해 많은 양의 쓰레기 발생
04-06	미디어아트 랜드마크조성(디자인 서울 2.0)	무분별한 전력낭비, 탄소발생
04-09	세종문화회관 리빌딩으로 차세대 문화플랫폼 조성	외관을 제외하고 전면 리빌딩, 대형 외벽영상(미디어파사드) 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기후위기를 부추기는 사업
04-19	송파구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추진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여 녹지 감소 위험
06-03	서울시 지상철도 전구간 장기적 지하화, 지상구간은 선형복합문화공간 조성	지하화 시 전력사용과 관련 탄소배출 증가, 환기처리로 대기오염 문제,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 필요, 수목에 영향, 수자원 고갈 :장소마다 다른 조건이나 지질조사 충분하지 않음. 지반문제 포함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 필요 지하화 시 전력사용과 관련 탄소배출 증가하게 됨, 환기처리로 대기오염 문제가 발생 우려
06-04	간선도로 지하화 신속 추진, 지상구간 선형복합문화공간	지하도로에 가로등 및 환기시설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가 가중되고 환기처리로 주변 대기오염, 지하수 유출로 인한 지반침하, 상층부 식생 불량 등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 필요 계획상 공원화 하려 하나 서부간선도로의 예처럼 도로이용 가능성 높음
06-19	은평구 은평새길 추진	은평새길 구간에서 세계의 터널 존재. 거기에 2개의 터널이 추가로 생겨 대기오염 심각 예측 북한산 자락에 3개의 터널과 2개의 IC를 건설할 경우 북한산 국립공원의 경관과 생태계가 훼손
07-01	서울 전역을 수변감성도시로 조성 추진	수변감성도시 사업은 하천 경계부의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해 도시 미관을 살리고, 하천변 특유의 활력을 도시 계획에 끌어들이겠다는 취지. 그럼에도 일부 사업 구역이 야생동물보호구역 등에 위치해 있어(중랑천 상류), 생태교란 우려. 수질 수생태계의 영향 등을 고려 필요. 하천변 친수공간 벗어난 유휴부지를 주 대상으로 한다지만, 장마 시 출입 제한되는 하천에 거점을 만드는 방식이 옳은지, 계속해서 하천의 공원을 지향하는 것이 맞는지 논의 필요.
07-02	서울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세운재정비촉진지구(약 43만9000㎡), 종로구 중구 일대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선도를 위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이 진행중인 충무로, 광희동, 주교동, 효제동 일대(47만4,843㎡) 면적을 합하면 91만3,843㎡로 촉구장

		약 128개 규모에 복합개발이 빠르게 추진되는 것을 의미. 건설폐기물 처리 등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탄소를 고려하면 기후위기를 심화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도심권 녹지율을 3.7%에서 15%로 올린다는 목표를 두고 있지만, 자연기반해법 기후위기 대응은 원칙적인 배출 감소와 병행할 때 실질적인 효과 있기에 해당 공약으로 야기되는 개발사업의 순영향을 고려하면 기후위기 심화우려.
07-08	녹지네트워크(생활밀착형 공원 조성)	공원과 공원을 잇는 데크길 등 공원내 시설 설치과정에서 기존 녹지공간 훼손 우려.
07-18	노원구 수락산 자연휴양림 준공	도시자연공원 내 시설 중심 공원화 우려.
07-19	동대문구 배봉산 치유의 숲길 조성	기후적응 측면에서 산림치유 프로그램 활성화는 기꺼운 일이나, 데크길, 전망대 등 시설 중심의 사업은 산림 파괴로 이어짐. 개발사업으로 인한 토양유실과 벌목은 시민들에게 주어지는 적응효과와 같거나 보다 큰 기후영향을 야기할 수 있음.
07-20	서초구 말죽거리 근린공원 조성	공원 기능과 공익 유지를 위해 공원 보상 및 조성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타당하나, 실질적으로 공원 내 버스킹 마당의 수요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음. 공원 내 들어설 건축물도 마찬가지임. 기후위기 시대 도심 속 산림 보호를 위해 불필요한 개발 최소화 필요.
07-22	성동구 증랑천 정비	불법도로를 철거하고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원 계획을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로 수정함은 차량 이용 편의를 우선시하고 배기가스 배출량을 늘려 기후위기 악화시킴. 2022년에 친수공간 일환으로 설치한 조류관찰대 (살갓이다리)로, 관찰대 인근 원양 등 철새 개체 수가 급감. 조류 관찰대 설치 계획에 따른 조류 위협으로 개체수 감소 우려. 증랑천 야생생물보호구역 위치에 파크골프장 건설을 저지하였으나, 대체지로 고마물떼새 서식하는 모래톱 인근. 개체 위협 및 서식지 파괴 우려.
07-23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재조성	기후위기 시대 지하개발은 막대한 토양 탄소를 유실시키고 지상부 수목생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리모델링 과정에서 공원 내 수목은 이식 및 보존하여 생태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성목을 이식할 경우 고사할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 공원 재조성 과정에서 수목 및 공원 생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할 것임.
07-26	종로구 송현동 녹지공간 개방	관광버스 주차장 등 공원 지하개발로 토양탄소 유실, 지상부 수목 피해 예상
07-27	송파구 한강변 수변문화 공간 정비	성내천 생태하천 조성 예산으로 '자연형 여울공' 3개소 책정. 2020년 증랑천에 기존 낙차공을 자연형 여울공으로 교체한 후 하폭 좁아지고 물 흐름 및 생태계 단절되고 악취 발생한 바 있음. 본 사업도 같은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공원의 생태적 가치(자연성)와 공공성을 훼손하는 공약
07-28	공원 내 책심터 조성	기후적응을 고려할 때 시민의 공원 방문을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사업은 바람직하나, 건물 신설, 그로인한 산림 훼손, 에너지 소비량 증가 등 우려되는 지점이 있음.
09-09	생활속 어르신 복지시설 확대(노인요양시설 확충)	구립 서초 복합 복지타운SOC 녹지훼손 우려
10-07	생활 속 가까이 쉽게 즐길 수 있는 주민체육시설 확충	공원훼손(노을공원 파크골프장, 금천구 기아대교하부 리틀야구장 및 족구장, 오금근린공원 테니스장, 증랑천 창동교~당현4교 내 제2파크골프장9홀)
10-11	강동구민회관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 추진	공원훼손
10-13	도봉구 쌍문동, 방학동 생활체육시설 건립	공원 훼손: 도로 인접 녹지 훼손

③막무가내 개발로 미래가치를 훼손

공약 번호	공약사업명	공약사업 이행평가
01-01	누구나 살고 싶은 고품질 서울형 임대주택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용도지역을 4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용적율을 끌어 올릴 시, 다른 재건축 지역에서도 최대 용적률요구로 난개발 초래 위험
02-01	은평구 불광역, 연신내역 일대를 서북권 랜드마크!	과밀개발이 전망되는 가운데, 희소한 대규모 공원단지를 주민들과 논의 없는 개발로 지역주민들이 향유할 삶의 질과 미래적 가치 훼손
02-07	은평구 수색 역세권 복합개발 추진	저이용 공공부지의 민간개발로 공공성 확보 불투명
02-14	용산국제업무지구 중심 新용산시대 신도심조성	현 시장이 역점 사업으로 다루고 있는 초고밀 개발인 만큼 대규모 개발은 확실시되며, 보다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용산정비창 부지를 개발 논리에 입각하여 소모하는 것에 대해 우려함 주택공간위원회 강동길 위원의 지적과 같이 개발 부지에 반값아파트 등 공공주택 정책 포함 미지수
02-28	서초구 서초로 일대 복합개발 추진	서초구에 얼마 남지 않은 공공부지, 최선의 활용방안인지 고민해야
02-32	노원구 광운대 역세권 복합개발로 지역활성화	정부 경영평가 압박으로 코레일 부지 매각(예정가 4978억원) 재무지표가 개선되는 듯 보이거나 기관의 사업추진과 내부구조 등 개선 미미, 매각 추진 후 건물이용 위해 수백억의 임대료 지불 기관(석유공사) 우려. 사모펀드 등 민간자본에 큰 차익 주는 특혜
02-34	삼표레미콘 부지 청년문화중심 복합개발 추진	800% 용적률 변경으로 삼표그룹에 천문학적인 시세차익 전망. 토지가격 3배 상승, 부지 활용도 5배 예상, 토지가치의 초과이익 60%(6천억)를 공공기여금 환수 방침이나 토지가치 상승이 아닌 개발이익 기준 환수 필요 용적률 800%와 토지가치 초과이익 60% 환수는 삼표그룹 오너일가 수익보장을 위한 미래가치 포기 의혹
02-39	상암DMC 랜드마크타워 첨단복합으로 재추진	초고층 빌딩은 건물의 특성상 향후 오랜시간 도시의 미관은 물론 토지의 균형적 활용에 고정변수로 작용할 가능성 높음. 따라서 지나치게 두드러진 건물은 미래세대 공간 자원 일부 전용하는 것
04-01	노들섬을 글로벌 예술섬으로 재조성	조류나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 훼손 한강수변문화의 정체성에 대한 고려나 고민 없이 단순 보여주기식 개발 공약
04-04	문화비축기지 재정비	‘시설관리’라는 행정중심 관리체계에서 벗어나 ‘시민 활동 중심’으로의 이행(안) 필요 ‘시설 및 문화콘텐츠’의 단순 공급형 계획이 아니라, 공론장에 기초한 재정비 프로세스와 이를 위한 설계가 필요
04-05	제2세종문화회관 조성	각 지역이 지닌 고유한 문화적 가치 혹은 해당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지역 특색)을 개발하는 방식으로서의 지역 접근이 아니라, 서울시를 하나의 랜드마크화 하기위해 개별지역에 막무가내 시설을 건립(시장의 공약 사업을 위해 지역을 대상화, 수단화)
04-06	미디어아트 랜드마크 조성(디자인 서울 2.0)	민간 주도형 축제가 아닌 일방적인 관 주도 계획
04-12	서울광장을 책과 문화의 광장으로 조성	사업근거로 제시한 도서관법 및 독서진흥법안 등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서울시가 관내 공립·사립 작은도서관을 지원해오던 예산을 전액 삭감 문제와 다르게 적용 되었으며, 서울도서관에 한해 특별 지원, 예산 대폭 증가. (기존 작은 도서관 지원금 380개 정도 도서관 한해 78억 지원)
04-16	종로구 이건희 기증관 송현동 조속 건립 지원	송현동 부지의 문화/생태적 가치 보존 위한 사회적 공론화, 주민참여 없이 개발 추진
04-21	정보사 부지, 문화예술복합타운 건립	행정관료 주도의 퇴행적인 개발 사업. 행정 편의적인, 공급되고 소비되는 복합타운 조성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참여와 정보사 부지에 대한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담아낼 수 있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 서울 전체의 문화적 풍경과 문화공간의 재구성을 위한 원칙과 전망, 방법론을 민주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04-22	강서구 서남권 문화예술 랜드마크 조성	서남권 문화예술 랜드마크가 조성돼야 하는 타당성이나 근거 부족, 서남권의 문화 인프라 부족을 랜드마크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
05-01	명동, 동대문, 남대문, 이태원, 홍대 등 관광특구 활성화	관광특구 지정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 유발 및 지대 상승 우려
06-04	간선도로 지하화 신속 추진, 지상구간 선형복합문화공간	유지 위한 지속적인 관리 필요한 수변공원의 향후 계획 미비, 주민들과의 소통 부재
07-02	서울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사업추진 위한 도심복합개발특례법이 제정될 경우 법적 상한 용적을 1,500%를 넘는 용적을 완화로 민간에 개발 권한이 대폭 이양되는 만큼 개발사업의 진행속도가 현재보다 빨라질 것. 세운지구를 예시로 들며 녹지를 35%이상 만들면 건축물 높이를 최대 120m 이상 허용할 것이라 이야기함(중요 문화재 심의로 고도제한, 한양도성 일대 90m 높이 제한 등 기존 규정 무력화). 이런 초고층 고밀도 개발은 도심 과밀화를 유발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며, 내사산, 종묘 등 사적이나 자연 경관이 더욱 사유화되는 문제로 이어짐, 세계문화유산(종묘)의 제1가치인 보편성 훼손됨. 충분한 개발이익 환수장치와 원주민에 대한 주거 안정 대책(개발비 부담 능력이 없는)이 함께 제시되지 않으면 난개발·특혜논란이 잇따를 것.
07-09	둘레길 확대 및 힐링여가 중심 공간으로 업그레이드	둘레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코스 및 안내 체계 개편 필요성 수용, 다만 스카이워크, 조망대 등 산림 내 인공시설 확대로 생태계 단절과 암반 파괴, 토양 유실 등 부작용 우려. 100인 원정대와 코스 가이드, 야간 트레킹 등 프로그램 중심의 여가 수요 대응은 바람직하나, 무장애길, 테마산책길 등과의 연결을 통해 추가적인 시설화 발생 우려 기존 참나무 등 활엽수나 아까시 등 외래종 제거로 오랜기간 형성해온 생태계를 해치는 결과 우려
07-11	녹지네트워크(용산공원 국제적 생태공원 재탄생 속도 내도록 정부와 협력)	용산역 앞 공원부지 지하개발 및 정비창 부지와 용산공원을 잇는 과정에는 서울시의 국제업무지구 구상 및 남북녹지축 연결계획 등이 포함. 공공용지인 용산정비창 부지의 70% 이상을 상업시설 단지로 채우고 용적을 1,500% 이상의 초고층 건물 을 허용하는 국제업무지구 조성 계획은 서울의 몇남지 않은 공공부지의 공공성을 크게 저하시킴. 더불어 교통 입체화를 위해 신분당선 연결 등 기존 계획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추가적인 지하개발로 이어진다는 문제가 있음.
07-13	서대문지역 대형공원(백련산 일대) 조성	지역별 공원불균형 해소 위해 거점공원 조성은 공원서비스 제공 측면에선 긍정적이나, 방향에 오류가 있음. 실질적인 공원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생활권과 가까운 평지형/가로녹지, 공원 등이 확대되어야 함. 기존에 공원으로서 활용되고 있는 공간에 시설 중심의 공원 활성화 계획을 내어놓는 것은 공원서비스 불균형 해소가 아닌 산림 파괴임. 백련근린공원 지대가 높아 진입경사도 가팔라 지역주민 산 위에 거주하는 주민 외에는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짐. 서울시는 백련근린공원에 산수유, 뽕나무 등 경관숲과 무장애데크길, 휴게쉼터, 전망대, 자락길 연결 및 정비 등을 계획하고 있으나, 시설중심의 공원개발은 결과적으로 산림형 공원의 공공성을 저해함. 백련근린공원에 무장애데크길을 설치하더라도 보행약자의 진입이 요원하며, 경관숲(봉산의 경우 치유의 숲) 조성의 경우 현재 자리잡은 식생을 제거하고 새로이 식재할 가능성이 높음.
07-22	성동구 중랑천 정비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중랑천 통수단면적 증대 계획 있음. 이 계획과 더불어 오염 저감 일환으로 280만톤의 모래를 새 모래로 교체할 계획. 모래 교체 과정에서 동식물 서식지 파괴, 산란지 파괴, 생태계 교란 발생하므로 매우 우려스러운 난개발임.
07-23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재조성	공원 내 대형 랜드마크 등 시설 개발은 공원의 공공성을 장기적으로 훼손하는 방향이라고 판단됨. 공원 내 시설 건립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공원을 해제한 이후 제2세종문화회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공원 면적이 줄어들게 되는 문제가 있음.
07-25	마포구 연트럴파크 착공	연트럴파크 연계성 강화 및 도심 선형 녹지 확충이라는 가치를 띄고 있지만, 재원마련을 위한 도심 고밀도 복합개발 사업이 다수 얹혀 있어 과도한 민간 특혜가 예상됨.

07-26	종로구 송현동 녹지공간 개방	우리나라 국토 특성상 건립이 어려운 평지형 공원 부지 일부에 시설을 건립하며 공원으로로서의 공공성이 저하될 것임.
-------	-----------------	-----------------------------------------------------------------

④ 정치/사회적 갈등을 유발

공약번호	공약사업명	공약사업 이행평가
02-01	은평구 불광역, 연신내역 일대를 서북권 랜드마크로!	이미 기존에 지역사회의 공공재로서 기능하던 서울혁신파크 용도변경으로 혁신파크를 거점으로 하는 시민사회단체, 사회적기업, 인근 지역주민들의 반발
02-03	청와대 주변지역 상권·녹지 활성화	전임 시장 추진하던 '백년다리' 사업 전면 백지화 후 추진 예산의 중복사용, 사회적 갈등 초래 광화문 일대 주민들의 교통정체 등 의견 미반영
02-04	마곡 도시개발사업 신속한 완공 추진	복합쇼핑몰 조성으로 공방시장 등 전통시장에 입점해 있는 상인들의 피해가 명확하나 이들을 위한 대책이나 의견수렴이 미흡
02-05	노원구 창동차량기지 지역경제활성화시설로 신속 추진	창동기지와 도봉면허시험장에 서울대병원건립 및 바이오복합단지 조성 계획, 의정부시의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관련 협약 반복, 취소로 불투명
02-33	광진구 동서울터미널 대변신! 첨단복합화+주민편의시설 대폭 확충	퇴거 문제로 현재 건물주인 HJ중공업과 입주상인들 간 갈등 지속. 사업시행자인 신세계가 사전협상 등 정해진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HJ중공업과 입주상인들의 문제가 지속되는 한 대금 지급 등의 측면에서 사업지연 가능성 농후
02-36	노원구 태릉골프장 개발계획 전면 재검토	공공주택단지 건설 찬성측 : 주택난 심각, 노원구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노원구 인구 유입 기대 공공주택단지 건설 반대측 : 극심한 교통체증 유발·미세먼지 증가로 주민 건강권 위협, 멸종위기종 야생동물의 서식지 파괴 등 자연생태환경 파괴와 그린벨트 훼손, 조선왕릉 태릉강릉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취소 우려
02-37	중랑구 SH공사 신속 이전으로 신내·망우동 균형발전 촉진	경영지원처 : 사옥 이전 추진에 노조가 반대하는 만큼 본사를 중심으로 절반만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며, 한편 사옥 신속 시 층수와 관련한 인근지역의 일조권, 조망권 침해 여부도 검토 필요. 이에 대한 인근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필요
04-05	제2세종문화회관 조성	기존 영등포구 문래동에 제2 세종문화회관을 건립 계획이었으나 지난 3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 따라 제2세종문화회관을 서울 여의도공원에 건립하겠다고 발표. 그에 따른 영등포구내 찬반양론이 있는 상황
04-06	미디어아트 랜드마크 조성(디자인 서울 2.0)	강남권 집중 문제(문화균형발전과 거리가 있음)
04-10	청년 문화예술인 창작지원금 등 지원사업 확대	시혜성 사업, 2017~2021년 동안 당사자 중심 합의 체계 및 누적 담론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사업 기계적 세대구분이 장기적으로 세대 갈등을 강화시킬 위험이 있음
04-11	취약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약자와의 동행' 기조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시혜적 시선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 필요
04-16	종로구 이건희 기증관 송현동 조속 건립 지원	기증품 검증과정 부재 및 구입과정에 대한 의혹 이건희 명칭 사용의 적절성과 삼성 특혜 논란
04-19	송파구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추진	대학 내 학생 및 교수는 서울 내 이전을 바라지만 그린벨트(개발제한 구역)를 해제해야하는 문제가 있어 복잡한 이해 관계가 있음
05-01	명동, 동대문, 남대문, 이태원, 홍대 등 관광특구 활성화	관광특구에 대해 예술인과 관광업계와의 갈등
05-02	송파구 풍납동 역사문화 중심도시 개발	백제 수도 위례성 추정 지역. 1963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1990년대부터 발굴로 성벽 위치 확인, 궁궐터 발굴 예정. 지역민 이주계획 지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8~14층 높이 규제.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건축규제 완화 요구. 23년 서울시는 신통기획안으로 미규제 면적의 층수를 35층에서 40층 내외로

		규제완화
06-08	도시첨단물류단지 추진	신정도시첨단물류단지 :지역주민 반발 가능성
06-19	은평구 은평새길 추진	자하문길, 검정길 등에 교통대란 야기, 종로구 주요 도로 및 도심 전역에 교통 체증 가중 예상으로반대의견 표명 사업. 전문가들은 은평새길 종점부인 부암동~경복궁 구간이 도로교통 용량에 한계가 있어 새로운 교통 혼잡 예측, 은평뉴타운, 삼송택지지역 주민은 환영하나 종로구 주민들은 반대. 주민들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인 사업계획 추진으로 갈등 발생. 종로구 주민협의체를 구성했으나 종로구에서 협의 거부 중(2014) 반대결의안 종로구의회 만장일치 채택(2023)
06-23	동대문구 장안동 물류터미널을 복합편의시설로	개발로 인한 교통량의 증가, 특히 화물차가 증가하면서 주변 지역의 소음, 대기 오염, 안전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07-02	서울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세운재정비촉진지구는 2006년 오세훈시장 임기 당시 처음 지정되었으나 진행되지 못하고, 2014년 박원순 시장 때 중지 결정으로 재생사업 추진(다시 세운 프로젝트). 오세훈 시장 재개발 추진으로 기조가 변화하며 인적지원 사라졌고, 세운지구 일대 상인들도 이주대책 등 영업 지속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우려를 품고 있는 상황이나, 서울시에서는 임시상가 개점 등 실효적인 대책 마련보다 주민 공청회, 설명회 개최하겠다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
07-13	서대문지역 대형공원(백련산 일대) 조성	백련근린공원 일대 논골마을 주민들은 서대문구청의 파크골프장 건설계획 반대 대책위 구성. 차량통행량 증가로 안전사고 위험 증가, 공원 면적 축소 및 기능 저해, 지역 주민들은 이미 공원을 잘 이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임. 공원 등 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시설은 물리적 위치에 따라 공공성이 제한되며, 지대가 높은 백련산의 경우 더욱이 그러함. 지역 주민들은 공원 내 과도한 운동시설 확충을 반기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시는 이러한 입장을 파악 못한 것으로 보임.
07-20	서초구 말죽거리 근린공원 조성	공원 기능 유지를 위해 핵심적인 구간만 보상을 완료한 상태로, 해당 지역 토지주들이 소송을 제기하며 마찰을 빚고 있음.
07-23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재조성	현재 여의도공원 재조성 및 제2세종문화회관 사업 등 추진하기 위한 절차적 공정성이 미비함. 급작스러운 사업대상지 변경과 관련한 주민 소통 및 의견수렴이 필요. 영등포구청은 서울시의 제2세종문화회관 이전을 환영하고 있지만, 대다수 문래동 주민들은 반대.
07-25	마포구 연트럴파크 착공	수색역 차고지 이전의 경우 2019년 고양시 이전이 예고된 바 있으나 거센 반발을 받은 바 있음. 차량기지 이전에 지역사회와 상 당한 마찰을 빚을 것이 예상됨. (철도시설 이전 및 이전부지 개발과 관련하여 이전대상지 주변 고양시 주민 요구사항에 대한 타 협방안 마련 위해 고양시 및 주민 협의를 22년 2월부터 코레일이 진행)
07-26	종로구 송현동 녹지공간 개방	송현동은 용산기지와 마찬가지로 1세기 이상 시민들에게 금단의 땅으로 존재해왔고, 외국 대사관, 군 등이 주둔한 역사가 있는 공간으로 온전한 공원으로서 조성하고 이견회 기증관 건립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나, 현재 서울시는 이견회 기증 관 건립을 확정지은 상황.
08-01	서울형 키즈카페 100개소 조성	자치구별 수요조사에서 최대7개, 5개구는 0개소로 향후 자치구별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예측.
08-05	양천 키움센터(방과후 돌봄) 건립	아동돌봄시설의 경우 지속적으로 자치구 편중으로 인해 격차발생
09-01	'안심소득'으로 복지사각지대 없는 서울	사회변화에 맞는 복지제도의 변화를 이끌 생산적 논의가 필요한 정책이나 기본소득과 대칭점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갈등 소지 존재
09-09	생활속 어르신 복지시설 확대(노인요양시설 확충)	노인요양보험 시설이 기피시설로 인식되어 건립되는 지역주민과의 갈등 가능성 매우 높음(입소대기자가 많아 해당건립지역 주민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식의 협상하고 있음)
09-21	시립 공공실버타운 조성	주민반대 우려 높음

⑤예산낭비 발생 및 목표 달성 어려움

공약번호	공약사업명	공약사업 이행평가
01-03	다가구, 다세대 밀집지역 모아주택, 모아타운 추진	면적 때문에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거나 기존 재개발이 가능지역에도 불필요한 공적자금 사용될 우려. 한편으로는 소규모단지의 특성상 사업 이해도와 추진 역량이 낮아 사업이 목표치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
01-05	청년주택의 2030 스마트홈 대변신	기대만큼 저렴하지 않은 임대료에 취약 청년보다는 어느정도 여건이 되는 계층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정작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높은 임대료를 감수하며 입주해도 선호도가 낮은 협소한 주거환경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
02-03	청와대 주변지역 상권·녹지 활성화	사업 시행 전부터 막대한 예산지출 계획, 시행 단계에서 계속된 추경 편성 및 예산 증액으로 최종예산액 가능할 수 없음. 광화문 월대 복원 등은 일각에서는 역사적 상징성이 없는 문화재 복원에 불필요한 예산을 투입한다는 비판
02-05	노원구 창동차량기지 지역경제활성화 시설로 신속 추진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의 이전이 의정부시의 변심으로 철회 위기에 있어 사실상 대체부지 물색 등의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
02-12	구로역 일대의 복합개발 추진	구로차량기지 이전 예정지인 광명시와 갈등 첨예. 지자체들 뿐만 아니라 주민 반대시위 및 집회 등 갈등 심화. 광명이전 타당성 재조사 결과 백지화로 사업추진 불투명
02-38	광진구 광장동 체육시설부지 문화인프라 조성	오랫동안 방치되어왔으나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계획이 정해진 바 없으며, 대부분의 예산이 임기 후에 잡혀있는 바, 임기내 조성 불투명
02-39	상암DMC 랜드마크타워 첨단복합으로 재추진	경기 악화 및 건설사의 유동성 악화로 사업자 랜드마크 타워부지 매입 신청자 없어 무산
04-02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급격한 금리인상과 금융비담 부담으로 대형복합개발사업 지연
04-06	미디어아트 랜드마크 조성(디자인 서울 2.0)	축적 전체기간 15일, 총 사용 예산 26억, 전체 공약 중 시민안전 공약에서 삭감된 예산만큼의 신규 예산 편성 사업
04-09	세종문화회관 리빌딩으로 차세대 문화플랫폼 조성	광화문 일대 미디어 랜드마크 조성계획과 더불어 전면 리모델링 계획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 지출
06-10	서울 동부지역 주차 환경 개선	그린파크사업으로 예산을 계속 낭비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주택가 한복판에 땅을 매입해서라도 공영주차장을 제대로 지어놓고 주민들이 이용하는게 맞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06-11	수서역 환승주차장 부지 첨단 복합화	사업의 형태는 잡혀있으나 실질적인 계획이나 실행 방안이 뚜렷하지 않아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됨
06-19	은평구 은평새길 추진	주민반대, 지하화 예산 미확보로 국비확보 필요, 사전절차 필요
06-21	중랑구 신내IC 지하차도 신설	태릉CC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하여 진행 할 계획이었으나 국방부의 태릉골프장 부지 주택1만호 건설반대 입장 표명으로 사업추진 불투명
07-05	플라스틱 재활용률 제고	투명페트병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Bottle to Bottle 재활용이 되게 하려면 무인회수기 설치 이전에 집에서 배출되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 안착이 우선. 무인회수기 설치 업자 외에 만족 어려움, 기업들의 생산재질을 통합하도록 강제하는 게 중요, 일회용품 등에 서울시만의 디자인을 만든다던지..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선 시가 어느정도 강제력을 발휘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통제할 수도 있을 것
08-01	서울형 키즈카페 100개소 조성	기존 100개에서 400개 확대조성 시 4천억 이상 조성비용과 운영·관리비, 인력운영 소요. 주민들의 반응이 좋으나(이용자 만족도 98.9%) 유휴공간 발굴의 어려움으로 신규 키즈카페 설치비 예산의 불용 예상, 설치 지연으로 인한 조성비, 운영비 불용 예상. 출산을 감소 따른 이용을 저하 시 다른 시설로 변경에 따른 예산낭비 우려
08-03	모아어린이집 100개 공동체 확대	모아어린이집 국공립 107개, 민간 71개, 가정65개(2023. 6.7 현재) 국공립: 민간, 가정 =1:1.2 비율로 원아 감소로 폐원위기인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적 강화 보다 국공립 어린이집 추가지원 성격 강화 미취학아동 감소에 대한 대응 측면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강화와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중 무엇이 적절한지 판단필요 국공립 원장, 교사들의 추가수당 지급 제도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교사당 담당 아동수를 낮추는 교사인력 확대와 비교 시 사업효과성 의문 22년도 입소대기자 중 모아어린이집 통한 입소조정 88명, 시민들의 낮은 신뢰도

		를 반영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음.
08-04	정기적으로 방문해 도와주는 '우리동네돌봄단' 확대	찾아가는동주민센터, 긴급돌봄SOS, 우리동네돌봄단 등 위기가구 발굴사업의 경우 중복성
09-01	안심소득으로 복지사각지대 없는 서울	안심소득의 경우 현 기초생활수급제도와 기본소득의 장단점을 극복하는 대안으로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국가단위의 제도를 서울시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 온전한 성과달성 어려움
09-02	장애인 생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강화	22년 (신규)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목표 5,743명 중 3,439명, 574,300천원 예산 중 299백만 집행(52%) 예산불용
09-04	장애인 버스요금 무료 추진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으로 일반인 버스이용 수준(43.6%) 증가 예상하여 목표 수립하였으나 서울특별시 재단 202220 22년 장애인 전수조사: 지체, 뇌병변 장애인 조사에서는 장애인 13,338명 중 버스(54.4%), 지하철 (49.7%)을 거의 이용하지 않음으로 조사된 바 과다계상으로 인한 불용 예상 (외출 시, 자가용이 24.8%, 서울시 버스 무료 이용 시 주1~2회(17.3%), 주3~5회(16.0%)로 응답) 교통카드 실제 사용자가 당사자인지 확인 가능한지 의문, 이후 부정사용으로 장애인에 대한 시민감정 악화요소 가능성
09-05	중증장애인 수도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존 감면대상자 중복으로 제외로 예산집행을 41.8%로 3,054백만원 지출, 23년 예산 6,358백만원으로 불용예산
09-12	어르신 안심 병원 동행	대상, 서비스내용 중복, 통합 및 체계화 필요
09-15	발달장애 디지털 트레이닝센터 확대 조성	22년도 결과 시설별 관심도 및 공간확보 곤란으로 2개소 모집에서 1개소 축소, 목표달성 불투명
09-16	디지털 소외계층 정보격차 해소 지원	기존 디지털배움터로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정책이 존재하나 공약사업으로 인해 디지털플라자 추가 조성
09-17	1인가구 불편, 불안, 불만 3불 해소	앱 불안정 시민평가, 21년까지 안심이 앱, 안심귀가 스카우트 이용률 저조 스카우트, 보안관 등의 사업은 기존 자율방범대 역할(인건비 지원없어 형평성 문제), 자치경찰총괄과의 주민참여 자치경찰 치안정책 사업과 중복 1인가구 주거안심상담 지원서비스 운영: 서울시 중앙주거복지센터와 중복
10-02	스마트 건강관리 '손목닥터9988'	8개월 대어 뒤 수거, 재활용 과정에서의 예산낭비 참여도, 만족도 미흡으로 예산낭비
10-05	당뇨 지원 등 건강안심서비스	어르신건강관리서비스와 중복, 통합 및 체계화 필요
10-12	노원구 강북권 학생체육관 개관	노원구 조례 폐지로 사실상 백지화
11-01	'서울런'으로 교육격차 해소, 교육사다리 실현	EBS, 서울시교육청 e학습터, 서울시 평생교육포털 등 유사 학습 콘텐츠가 이미 구축·제작·보급되어 공적 시스템인 공교육의 강화 대신 사교육 시장에 교육을 맡겨 공교육의 신뢰를 저해 사교육격정없는 세상(22.4.) 서울런 이용 대상자 11만명 중 9000명 7.9% 가입. 이중 재신청 학교 밖 청소년 50%, 저 소득층 자녀 65%, 평균 진도율 49.5%
11-06	미래 인재가 자라나는 교육도시 조성	교육지원정책과의 서울런 사업과 연계된 멘토링사업인 서울형멘토링 사업과 유사
11-07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대상 평생학습 장학금 통한 학비 보조추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바우처 사업, 국민내일배움카드와 중복 (서울시 참여 장학금 연간 60만원/ 국민내일배움 카드 5년간 300만원)

⑥계획 부실 및 진행과정 미비

공약 번호	공약사업명	계획 부실 및 미비
01-02	재개발·재건축 신속통합기획 확대 및 쾌속 추진	신속통합기획 정비구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병행하는 모순된 행보로 재개발사업 추진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소지가 있음. 시의 방침대로라면 올해 말 진행될 3차 후보지 공모에서도 신청한 구역들은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기 때문에 규제는 규제대로 받고 사업 추진도 못하는 지역발생, 취지와 달리 재개발사업 확대에는 부정적인 결과 초래
02-40	마포유수지 상부 문화관광형 복합개발 추진	기본 및 실시 설계 일정 지연으로 각종심의 일정 및 공사착공 지연
04-01	노들섬을 글로벌 예술섬으로 재조성	사업의 추진과정, 추진이유, 추진효과 등 사업 시행의 근거나 타당성 없이 시장의 의지만으로 강행(서울시민 문화육구나 여가 활동의 동향 및 경향에 대한 조사나 의견수렴 과정 없음)

04-02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자재값과 인건비 인상, 대출이자 등 자금조달 비용 증가로 사업지연
04-03	잠실 MICE 복합문화공간 돔구장 조성	자재값과 인건비 인상, 대출이자 등 자금조달 비용 증가로 사업지연
04-20	서대문구 김병주 도서관(북가좌동 가재울 뉴타운 서울시립도서관) 신속 건립	사업지연
04-24	강서구 발산동 도서관 부지 복합 커뮤니티센터 추진	사업지연
06-07	도로·신호체계 개선을 통한 교통혼잡 해소 (동작구, 강북구 등)	구체적인 계획 수립 불분명
06-18	강남구 양재대로 구조개선 조속 완공	사업 절차상 시행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는 문제. 전력구 이설과 관련해 당초 관망도와 다르게 매설되어 있어 공사 지연으로 시민 불편 증대.
06-19	은평구 은평새길 추진	현재 은평새길 전구간을 지하화 하는 것으로 바꾸었지만, 실제 교통체증에 효과 의문
06-20	동작구 이수~과천 복합터널 추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 사업기간도 13년(2017~2030년도)으로 예정되어 있어, 현재 추진 중인 국비 지원 사업(4년)보다 3배 이상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 임기 내 불가능
07-04	제로웨이스트 서울 프로젝트 확대	(제로카페) 현재 서울지역 다회용컵 보증금제는 강제력 없어 확산 어려움 (제로마켓) '서울 제로마켓' 200개소 모집(신규 50개소/기존매장 50개소/프랜차이즈 100개소) 250만원 지원 : 현재 서울시 제로마켓 70% 개인운영, 프랜차이즈 기업 중심의 확대와 지원은 마을 기반 자원순환 거점 역할을 어렵게 이어가는 개인상점에 타격 공공기관 청사 내 일회용품 반입 금지 우선 시행 필요
07-06	기후위기 대응, 비건 인식 및 산업 확산	기후환경본부에서 기후 위기 대응을 목표로 내걸었다기엔 빈약한 공약이라고 보여짐. 채식 식생활 홍보 강화 활동과 관련해서 시의회, 시 내부에서도 비관적인 의견이 있음. 근본적으로 축산환경을 개선하는 데까지 나갈 수 있는 장기적 정책 로드맵이 필요.
07-07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추진	기존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통한 지속활용, 주민편의시설 조성 등은 긍정적이나 1000톤 규모의 광역자원회수시설 조성을 감안 기존의 자원회수시설 운영만으로 전체 생활쓰레기 관리 가능하도록 쓰레기 감량 로드맵 필요. 시민참여(민간전문가 자문 1회) 저조. 마포구 주민들의 반발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시민참여 필요
09-11	디지털 소외 및 격차해소 지원 확대(스마트경로당 확산)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에 맞춰 급조된 사업으로 사업준비 부족
10-03	안심치매2.0	치매안심센터, 컨트롤타워 역할 부재, 연계체계 부족, 노인, 복지, 의료급여 등 관련성이 높은 제도와 정책의 연결고리가 부재, 직접사업 수행기관에서 치매환자관리 기능으로의 전환이 필요 치매 전문인력 부족(73%임시직 고용불안) 지역 내 유관기관 협력체계 미흡 센터 치매 초기 진단검사와 협약병원의 감별검사의 검사단계 분절로 전문성 부족한 센터의 치매진단의 부적절, 비효율
11-04	직장인을 위한 인생전환 준비센터 미래 시민학교 조성	명칭의 계속된 변화, 명확한 활용목표와 계획 부재해 보임
11-05	신산업 특화 '복합 평생학습 공간' 조성 확대	목적달성을 위한 프로그램 부실
11-13	신영동 시립청소년센터 다기능 복합화 건립 추진	장소의 적절성 접근성 떨어지는 위치

